

2003-1-27

신문 문장 분석

- 사실, 칼럼을 중심으로 -

김 세 중

2003



국립국어연구원

2003-1-27

신문 문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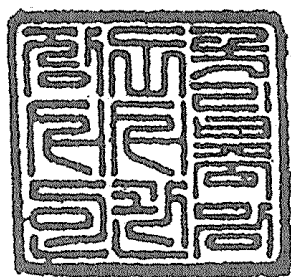
- 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

김 세 중

2003



국립국어연구원



3052107

머 리 말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국어는 맞춤법과 표준어의 질서를 세우는 데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아직도 완전한지는 않지만 이제는 대체로 맞춤법과 표준어의 틀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문장의 수준은 아직 그리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비문법적인 문장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글, 주관과 객관이 뒤섞인 된 글 등이 많아 국어의 문장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이 정성을 기울여 썼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글에서조차 술한 문제점이 있음이 국립국어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국어 문장의 수준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서구의 문명 언어의 그것에 못지않게 끌어올려야겠다는 의도에서 우선 각 분야에서 쓰이는 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신문의 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것이 이 보고서이다.

신문은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즐겨 읽는 매체이다. 따라서 신문의 글은 대중의 국어 지식과 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번 조사의 결과 신문 기사 문장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압축해서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에 생략이 지나치게 되고 그 결과 뜻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한정된 지면 때문에 압축된 표현을 추구하는 것은 신문의 특성상 불가피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쳐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문 제작이 늘 시간에 쫓기며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수많은 독자들이 신문을 읽고 신문의 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문 기사는 마땅히 모범적인 글

이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신문사의 관점에서는 다 옳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른다. 다만 신문의 문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거리는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신문 제작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3년 12월 22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남 기 심

<차 례>

머 리 말	1
일러두기	5
I. 서 론	9
II. 의미와 논리	15
1. 주관과 객관의 혼동	15
2. 주어 감추기	21
3. 불투명한 지시 대상과 근거 없는 단정	22
4. 정보의 양	26
5. 논리적 모순과 비약	28
6. 모호한 의미	36
7. 모호한 지시	47
III. 문 법	53
1. 성분 사이의 호응	54
2. 접속	98
3. 성분 누락과 생략	106
4. 조사	123
5. 문체	129
IV. 어 휘	139
1. 단어 선택	139
2. 형용사와 동사	147
3. ‘-시키다’	149
4. 외국어	162
5. 기타	167
5.1. ‘담보하(되)다’, ‘대목’	167
5.2. 새 말, 새 용법	171
5.3. 어미	173

V. 정 리	177
1. 사설, 칼럼 문장의 특징	177
2. 신문 문장에 기대하는 것	184
3. 앞으로의 과제	185

일 러 두 기

1. 이 보고서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주요 종합 일간지의 2003년도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차적으로 각 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달치를 뽑아서 분석하였다.

문화일보 ... 1월
한국일보 ... 2월
국민일보 ... 3월
조선일보 ... 4월, 11월
동아일보 ... 5월
세계일보 ... 6월
중앙일보 ... 7월
대한매일 ... 8월
한겨레신문 .. 9월
경향신문 ... 10월

단, 조선일보만은 4월과 11월 두 달에 걸쳤다. 그리고, 추가 보충 조사에서는 달에 상관 없이 2003년도 기사 전체에 대해 조사하였다.

2.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는 주로 <http://www.kinds.or.kr>의 기사검색을 통해 얻되, 각 신문사 웹사이트의 기사검색도 이용하였다.

3.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는 대부분 사설과 칼럼에서 뽑았으며 드물게 일반 기사에서 뽑은 것도 있다. 일반 기사는 주로 해설 기사이다.

4. 예문에서 문제되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건명조체로 함으로써 쉽게 눈에 띄도록 하였다.

증인, 참고인들의 국회 출석은 국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10/2 경향】

5. 예문을 제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뒤 문장을 함께 보여 주었다.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장만 제시하였다.

그러자면 지도자-수뇌급부터 영입해 그들의 지도 아래 새 정당. 새 정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왜 사람이 없겠는가. **지금 정치권엔 '사람'이 많아서 요 모양 요 꼴인가.** 각 분야엔 성실하게 살아오며 신망을 쌓은 사람이 많다. 정치권의 정성이 부족하고 판이 하도 더러우니 외면할 뿐이다. 특히 야당으로선 대안 인물이 없어 국민투표를 망설이는 형편이면서도 당수감.후보감을 영입할 생각은 않고 있다. 【10/27 중앙】

6. 예문 끝에 그 예문이 기사로 나온 날짜와 해당 신문 이름을 밝혔다.

7. 기사의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가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규범에 맞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이되, 설명할 때에는 규범에 맞게 바꾸었다.

I. 서론

벤 면

I. 서 론

언어생활은 문장을 통해서 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 역시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문장은 단어라는 조각을 연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동안의 국어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어의 형태와 표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표준어를 정하는 것과 그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를 놓고 오래 씨름했다. 바른 문장을 어떻게 세우고 보급할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문법학자가 문법의 체계를 정밀하게 세운다고 국민들의 문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문법학과 글쓰기는 그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수준은 단어의 표준과 표기를 세우는 일에 밀려서 매우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보고서는 준비되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써 내는 학위 논문의 문장 수준이 낮아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모든 교수들이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문장 수준이 문제가 많다면 과연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그런데 대학 사회의 글은 전문 분야의 전문적 글이라 내용도 어렵고 대중성이 없는 게 보통이어서 우선 대중성이 높은 글, 대중이 친숙하게 접하고 영향을 받는 글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신문의 글이다.

신문의 글도 뉴스 기사, 해설 기사, 칼럼, 사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 분야와 면에 따라 글의 특징이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먼저 사설, 칼럼부터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신문의 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뉴스 기사를 밀쳐 두고 사설, 칼럼부터 고찰하기로 한 것은, 뉴스 기사는 6하원칙이라는 뚜렷한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별로 문제될 것이 많지 않고 또 편차가 크지 않

우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뉴스 기사는 누가 썼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일정한 형식에 따르고 있고 그래서 개인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사실과 칼럼은 성격이 꽤 다르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가치 판단, 논리 전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오류를 범하기가 쉽고 그래서 논의할 거리가 많다고 보았다.

사실과 칼럼을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찬찬히 읽어 나가기로 하였다. 읽으면서 문제되는 것은 표시를 하고 메모를 하였다. 문제되는 것들의 유형이 참으로 다양하였다.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들,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들, 문맥에 꼭 들어맞지 않는 단어가 선택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다. 이를 분류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다. (1) 의미와 논리 (2) 문법 (3) 어휘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 분류는 빈틈없이 정연한 분류가 물론 아니다. 결국 서로 다 한테 만나게 되는 것이었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편의상 몇 가지 범주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을 뿐이다. 의미와 논리, 문법, 어휘가 만나는 접점은 결국 의미였다. 문제가 있는 문장들은 결국 의미 전달이 명쾌하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문법이든 어휘든 결국 정확한 의미 전달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사실, 칼럼 그리고 일부의 해설 기사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문의 사실, 칼럼이 매우 호흡이 빠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호흡이 빠르다 함은 압축되고 간결한 문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문장 속의 어떤 성분을 생략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생략하는 것은 모든 사실, 칼럼 기사를 일관하는 원리였다.

압축과 간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문만의 독특한 문체적 특성이 드러났다. 학교문법에서는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신문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동사가 없는 문장이 많다. 예를 들어 ‘그는 지금 이동중이다’와 같은 문장이 신문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인다. 또 ‘화재가 발생, 큰 소동이 벌어졌다’와 같은

문장도 신문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문장 유형이다.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물론 ‘화재가 발생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다’와 같이 써야 한다. 문장 부호인 ‘,’가 ‘하여’를 대신하는 것으로 신문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주어가 없는 문장이 많다는 것도 신문에서는 아주 흔하다. 예를 들어 ‘-는 보도다’, ‘-는 지적이다’, ‘-는 분석이다’와 같은 문장이 널리 쓰이고 있다. ‘-는 보도다’의 경우는, 어떤 보도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친절하게 말한다면 ‘-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할 것을 그냥 ‘-는 보도다’라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주어가 없다. ‘-는 지적이다’, ‘-는 분석이다’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지적, 누군가의 분석이 있었음을 전하는 문장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는 지적이다’, ‘-는 분석이다’와 같은 구문이 나타난다. 지적하고 분석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힌다면 ‘-라고 아무개가 지적하였다’, ‘-라고 아무개가 분석하였다’라고 할 것이다.

이상 들어본 신문 문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는 신문을 벗어나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에서만 쓰이는 그와 같은 구문을 과연 바른 문장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물론 ‘바른 문장’의 정의 자체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신문은 그 나름의 독특한 문장 구성, 문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의 글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있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해라체’와 ‘하라체’에 관한 것이다. 사설의 제목에는 ‘명사+하라’만 나타나고 ‘명사+해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밝히다’의 경우는 거의가 ‘밝히려’로 쓰이고 있고 ‘밝히려’는 극히 드물다. 왜 단어에 따라 다른 문말 어미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볼만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 보고서에는 수많은 사설, 칼럼 중에서 문제되는 것들만 수록되

어 있고 검토되었다. 병원에 환자들만 있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자들인 아닌 것처럼 신문의 사설, 칼럼이 오류로 가득찬 게 아니고 오히려 간혹 끼어 있을 뿐이다. 문제 있는 것들만 모아서 분석한 것인데 마치 사설, 칼럼이 온통 문제있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것은 필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리고 필자가 분석한 것이 다 전적으로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문법성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오로지 필자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견해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읽는 분들의 양해를 기대한다.

II. 의미와 논리

빈 면

II. 의미와 논리

1. 주관과 객관의 혼동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국민’을 주어로 내세우는 경우가 흔하다. 신문이 여론을 대변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관해서 말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국민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느끼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갖가지 노선과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뭉뚱그려서 국민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피곤하다’, ‘착잡하다’, ‘-고 싶다’와 같은 표현은 개인의 그때그때의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말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쓰기 어려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피곤하다’와 같은 말을 사설, 칼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신문이 어떤 특정 계층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그 계층의 느낌이나 반응을 대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을 주어로 해서 느낌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흔히 정치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국민이 어떠하다’, ‘국민이 무엇을 원한다’, ‘국민이 우리를 지지한다’와 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은 마치 모든 국민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투이다. 그런 정치가들의 행태를 늘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언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온갖 미사여구로 수식됐던 남북정상회담 이면에 이처럼 몇몇지 못

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만으로도 국민은 힘이 빠진다. [6/19 세계]

“소신 갖고 일해줘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줬던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에 국민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낀다. [11/25 조선]

물론 국민 전체가 대체로 어떻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예가 그런 예에 든다. 아래의 예는 ‘국민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가 아니라 ‘국민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로서 ‘-고 있다’ 구문을 통해 보다 객관적 기술을 하였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더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일테면 ‘국민은’ 대신에 ‘대부분의 국민은’이라고 한다면 좀더 객관적일 수 있다.

사실 국민은 아직까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1/25 문화]

아래의 예는 좀더 생생한 예이다.

웬만한 비리에는 눈 하나 깜짝 앓을 만큼 내성(耐性)이 생긴 국민이지만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받았는지 일일이 기억 안 난다”는 그 사람의 일수(日收) 적기식 수금 작태에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11/22 조선]

‘입을 다물 수가 없다’의 주어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국민이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것인지 사설의 필자가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문제가 있다. 주어가 ‘국민’이라면 ‘국민은 입을 다물 수가 없다’가 된다. 그

런데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수천 만명인 국민이 그런 상태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주어가 사설의 필자라면 ‘필자는’ 또는 ‘우리는’ 정도의 표현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웬만한 비리에는 눈 하나 깜짝 앓을 만큼 내성이 생긴 국민이지만 필자는(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가 되어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국민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과 ‘나’ 또는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객관과 주관을 동일시하는 것이요, 서로를 구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국민은 이렇게 느낀다’는 식의 문장은 흔히 발견된다. 몇 예를 보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기름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 업자들까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휘발유첨가제 판매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8월 1일 동맹휴업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은 정말 피곤하다. 지난 정권에서 발병한 '개혁 피로 증후군'이 미처 치유되기 전에 온갖 갈등과 집단행동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국민적 스트레스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 걱정, 나라 걱정까지 쌓이고 있다.

【7/24 국민】

국민은 순국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정부 고위인사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한 유가족이 "1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며 "내 아들이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느냐"고 묻는 데에 **국민은** 낮이 돌아올랐다. 정작 그 물음에 답해야 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6/24 국민】

국정의 세 축인 청와대, 내각, 우리당(신당)이 따로 놀고 있다. 삼위일체가 돼 국정을 끌고 간다고 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반목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은 혼란스럽고 피곤하다. 재신임 국민투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국정쇄신, 인적쇄신임을 거듭 절감한다. [10/24 동아]

'노출과다'와 말로 하는 정치는 한계가 분명하다. 오럴해저드에다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마저 추락하니 정국이 안정될 리 없다. 국민은 정말 피곤하다. [10/22 국민]

이제 정치판도 정돈될 때가 됐다. 정책과 노선으로, 또 정치개혁의 방법론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7/7 중앙]

국민 모두가 착잡한 심정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3주년을 맞았다. 3년 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의 정상은 손을 맞잡을 때, 만감이 교차하는 벅찬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씩씩하게 오늘의 남북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6/15 한국]

대통령 재신임이라는 부담만으로도 국민은 골치가 아픈데 다시 고해성사까지 들으라니 온 국민이 몸살로 앓아 누울 지경이다. [10/26 한국]

대통령은 분하고 야속한 일을 수없이 겪는 자리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분하다고 소리지르고, 호락호락 안 넘어가겠다고 버티면 나라가 시끄럽고 대통령의 체통이 구겨진다. 말없이 참아도 국민은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다. [9/14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개혁'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국민은 개혁이란 말에 식상한 지 오래다.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개혁을 소리높이 외쳤지만 대부분 별 실적 없이 임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10/26 한국]

5년 임기의 대통령이 1년도 안돼 재신임을 묻는 것은 그것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불쑥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선 것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무책임한 승부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이래저래 걱정이다. 빨리 타협의 결론을 내야 한다. [10/20 동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간에 벌이는 초보운전자들의 용감한 '폭주경쟁' 때문에 국민은 지금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고 나라는 뒤뚱거리고 있다. [11/27 문화]

이 말은 바로 지금 한국 국민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주역이 정치인이고, 국민으로부터 돈을 거두는 수법이 조직 폭력배에 비유되는게 오늘 한국 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11/17 문화]

이상의 예들은 마치 국민의 마음을 다 들여본 듯 표현한 예들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지나치다고 본다. 사실 집필자의 느낌이거나 더 확장해서 그 신문사의 논조에 공감하는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렇게 느낀다'와 같은 표현은 주관과 객관인 양 가장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아는 사실 필자들은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고자 애를 쓰기도 한다. 아래 예들을 보자.

막강한 국회 다수표를 조자룡 현칼 쓰듯 이런 명분 약한 일에 쏟아붓고 정작 나라경제와 정치개혁이라는 큰일에는 힘을 못 쓰는 거대 야당에 상당수 국민은 허탈해 할 것이다.

【9/4 중앙】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8/31 한국】

원로들의 뜻을 곡해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선언이 결과적으로 한 정파를 지원하게 된다면 원로라는 이름이 무색해 진다. 정파라는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새 정치를 부르짖는 정파'에 불과하다. 【7/6 한국】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말에 동감하고 있다. 노조는 이제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다. 【6/29 한국】

2010 년 겨울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결선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3표 차로 실패하자 **우리 국민**은 아쉬워하면서도 유치단의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단이 귀국한 뒤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 등에 의해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책임론'이 불거져나오면서 **국민**은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7/6 중앙】

‘국민은’ 대신에 ‘상당수 국민’, ‘대다수 국민’, ‘많은 국민’이라고 하여 그렇게 생각지 않는 국민도 있음을 보임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서민들의 느낌을 단정이 아닌, 추측으로 표현한 것도 좀더 객관적으로 쓰려고 애쓴 사례이다.

이런 일련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생활고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0/18 경향]

아래는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쓴 사례이다. 왜냐하면 아래 글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생각이다. 국민이 정권과 언론의 서로 다른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국민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잘하는 것이고, 국민이 언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론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노대통령이나 정권은 언론에 비판할 소재를 끝없이 주고 있고 국민은 그런 비판을 합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가 이를 입증한다. [6/4 문화]

2. 주어 감추기

신문의 글에서는 주어가 없는, ‘-는 분석이다’, ‘-는 지적이다’, ‘-는 생각이다’ 등과 같은 문장이 자주 사용된다. 누구의 분석이고 누구의 지적이고 누구의 생각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의 분석이나 지적, 생각인지 필자 자신의 분석이나 지적, 생각인지부터 우선 불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무책임한 표현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최근 테러가 터키 이스탄불에 집중된 것은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에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계승한 이슬람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터키는 이라크전

쟁과 관련, 미군의 자국기지 사용을 불허하고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전쟁기간 내내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의 테러들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는 지적이다. [11/22 조선]

또 접대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장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9 조선]

하지만 중국의 강경 입장은 대만 독립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 대만 독립파인 천 총통의 재선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1/26 조선]

굳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언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다른 나라간의 교류에는 한 두마디의 말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3/26 경향]

누군가가 했을 지적, 분석, 생각을 전하는 글에서 그 누군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밝힌들 ‘전문가들의’ 정도일 뿐이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가 타성이 될까 걱정된다.

3. 불투명한 지시 대상과 근거 없는 단정

사실과 칼럼은 부득이 특정 세력을 비판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

다. 그런데 그 비판 대상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애둘러 표현하고 만다. 이는 떳떳하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지시 대상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 지시 대상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말을 믿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믿으라고 요구한다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허구헌 날 시위 때만 되면 맨 앞줄에 나타나 얼굴 선전을 해대던 사람들은 나라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설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국민일 뿐이다. [11/21 조선]

‘허구헌 날 시위 때만 되면 맨 앞줄에 나타나 얼굴 선전을 해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글만 보고는 알기 어렵다. 아는 사람만 안다. 가장 객관적이고 명료해야 할 신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더구나 ‘나라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설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에서조차 관심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친북 세력은 이 보고서조차 미국이 의도적으로 과장했거나 사실 검증이 미비한 ‘주장’뿐인 것으로 평가절하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들에게는 ‘미국의 나쁜 짓’만 보이고 ‘김정

일 세력의 비인간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1/22 조선]

‘한국의 친북 세력은 ... 평가절하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말은 주관적 표현이다. ‘할지 모른다’는 표현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그런데 뒤이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가 무엇인지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엇그제만해도 강남 부동산 투기열풍을 놓고 '부동산 광란'이라는 표현을 쓰던 한 신문의 사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자 곧바로 '강남죽이기'라고 제목을 바꾼다.

정부가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할때 시장경제 운운하며 거품을 물던 어떤 신문은 외국계 투자사인 소버린이 단지 2000억 원을 투자해놓고 47조원 규모의 SK그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11/25 문화]

‘한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또 ‘어떤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필자만 알고 있을 뿐 독자들은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이념 말고 현실을 보면 조폭보다 더 못된 집단이 있다.

이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는 선수들이지만 설득과 협상을 통한 합의에는 익숙지 않은 막무가내파다. 대개 거창하고 정의로운 구호를 내건다.

그러나 정말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시민.사회운동을 한다는 일부 세력의 행태가 그렇다. 정부 정책을 설득하려 나선 군수를 집단으로 두들겨 패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우발적이라고 넘어간다.

기득권층을 싸잡아 배척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어가고 있음은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새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과격 노조**가 그렇다.

이들은 결국 사회 전반의 생산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자신들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생산물에 얹혀 산다. 결국 숙주까지 죽여버리는 가장 바보 같은 기생충과 같다. [9/22 중앙]

‘조폭보다 더 못된 집단이 있다’고 하면서 한참 비판하다가 뒤늦게서야 ‘시민, 사회운동을 한다는 일부 세력’이라고 조금이나마 지시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 ‘시민, 사회운동을 하는’도 아니고 ‘한다는’에서 못마땅해하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

또다시 국익을 핑계로 이라크 파병을 주장할 사람은 그 국익이란 다름 아닌 오늘 미국에 원정 출산차 가는 자들의 것임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다. 우리가 저들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저들은 자기들은 가지 않으면서 우리에게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9/22 한겨레]

지시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미국에 원정 출산차 가는 자들’이 어떤 계층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 ‘우리가 저들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저들은 자기들은 가지 않으면서 우리에게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이 특히 그렇다. 어디에 간다는 것인지,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새 정부 탄생으로 새해 초에는 여러가지 희망을 품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 두루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로 말하기도 간단찮고, 미국을 향해 샷대질을 해봤지

만 맥만 빠지고 무력감만 접쳤다. [5/21 한겨레]

‘당신’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후 맥락으로 미루어 거의 짐작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시 대상이 누군지를 독자의 추론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4. 정보의 양

기사의 정보가 빈약한 경우가 있다. 특히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하고 마는 경우가 있다. 취재원과 한 약속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기사의 정보는 많을 수록 좋음은 물론이다.

이들 기업이 중점수사 대상으로 선별된 배경에는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 계좌추적 및 당직자 진술에서 단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계좌추적은 알려진 것보다 오래 전에 착수됐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추가수수과 관련, 폭발력있는 단서가 잡혔다는 것이 다른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다른 사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11/22 조선]

‘알려진 것보다 오래 전에 착수됐고’라고 했는데 알려진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 정보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다른 검찰 관계자’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다. ‘다른 사정기관’은 검찰이

아닌 어떤 사정기관이라는 정보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역시 무의미하다. 끝으로 ‘언급된다’고 표현한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고 해서 누군가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언급했다’가 아니라 ‘언급된다’고 말함으로써 누가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아예 말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접대장소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9 조선】

과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기' 관행을 끝낼 수 있을까. **기업 관계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돈 먹는 하마'로 비유되는 현 정치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느 기업이 누구에게 얼마를 제공했는지 모르게 돼 있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법 정치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중략)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2001, 2002년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회계 부정 사태에 대처한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11/21 동아】

‘기업 관계자들은’, ‘전문가들은’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단정할 수는 없다. 문맥이 결정할 문제이다. 더 자세한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불충분하지만 그 정도로 충분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본인의 의견을 쓰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는 양심의 문제로 바른 글쓰기 태도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미 상무부가 1일(현지시각)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중략)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미국이 통상.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 외교.안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앞으로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우리 측의 철저한 대비와 노력이 없는 한 대미통상문제는 계속 꼬여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4/3 조선]

위에서 ‘전문가들은 ...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기사를 쓴 기자의 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재원을 밝혀서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석이 많다’는 어색하다. ‘분석을 하는 사람이 많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5. 논리적 모순과 비약

문장은 내부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 또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는 문장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논리적 비약이 있는 문장은 그 문장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에는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래의 예들은 신문의 글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과 비약을 안은 문장들이다.

뉴욕타임스는 후세인의 생존에 의문을 표시하는 린즈펠드 등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들은 이라크 국민에게 후세인이 이미 사라졌다

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살아 있다면 존재를 입증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2 조선]

뉴욕타임스의 지적에 따르면, 럼즈펠드 등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이라크 국민에게 후세인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후세인이 살아 있다면 후세인의 존재를 입증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후세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면 후세인이 죽은 것은 참이어야 한다. 후세인이 죽었어야 후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라크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곧이어 ‘살아 있다면 존재를 입증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뉴욕타임스의 지적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비록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하는 기사라고는 하나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 아니다. 이라크의 다수 국민은 쫓겨난 후세인을 증오했다. 겸손한 권력으로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라크에 가면 베트남에서처럼 한국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명분은 건설하다. 경제 실리에다 첨단 전쟁의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다. [9/24 중앙]

앞 문단에서는 이라크와 베트남이 다름을 강조하고 바로 이어서 이라크에 파병하면 베트남에서처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라크와 베트남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베트남에서처럼 한국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관련이 없다면 이라크

와 베트남이 다르고, 후세인과 호치민이 다르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재정위원장 방에 돈을 박스째로 재워놓고 선거를 치렀는데 이를 후보가 몰랐다면 누가 믿겠는가. **설령 몰랐다면 모른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선적인 행동이었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했는지 모른다. [11/3 중앙]

‘설령’과 ‘몰랐다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설령 몰랐다 해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민에게 깔려 있는 정계 불신의 상당 몫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방만한 면책특권에서 비롯된 부메랑임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욕설이나 헐담을 해야만 겨우 면책특권이 제한받는다면 '아니면 말고'식의 한탕주의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권위인 양 여기는 그릇된 풍조를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다.** 면책특권은 엄격하게 운용돼야 한다. [10/29 중앙]

‘욕설이나 헐담을 해야만 겨우 면책특권이 제한받는다’ 게 무슨 뜻일까? 욕설이나 헐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 누가 누구에게 욕설이나 헐담을 하지 않아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제한받지 않는 걸까?

그러자면 지도자-수뇌급부터 영입해 그들의 지도 아래 새 정당, 새 정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흔히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왜 사람이 없겠는가. **지금 정치권엔 '사람'이 많아서 요 모양 요 꼴인가.** 각 분야엔 성실하게 살아오며 신망을 쌓은 사람이 많다. 정치권의 정성이 부족하고 판이 하도 더러우니 외면할 뿐이다. 특히 야당으로선 대안 인물이

없어 국민투표를 망설이는 형편이면서도 당수감.후보감을 영입할 생각은 않고 있다. [10/27 중앙]

영입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목이다. '지금 정치권에 사람이 많아서 요 모양 요 꼴인가'라는 말은 '지금 정치권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역시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임을 전제로 한 말이다. 정치권의 주장과 '지금 정치권이 시원찮은 것도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필자의 믿음 사이에 관련성이 찾아지지 않는다.

盧대통령이 이렇게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부민청국(富民淸國)의 기틀을 세울 것이다. 부결된다면 그때 바로 사임해도 늦지 않다. 그래도 그것은 부패와 불의의 정치를 끊기 위한 '장렬한 전사'로 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야말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盧대통령뿐이다. [10/24 중앙]

'부결된다면 그때 바로 사임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은 노 대통령이 미리 사임할 의사를 보였을 때에나 가능한 말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미리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말이 없다. 그런 가운데 '부결된다면 그때 사임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논리적 허점을 보인다.

그런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번 노 대통령을 맞는 미국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후보시절부터 취임 이후 어느 시점까지, 노 대통령의 언행은 미국에 대해 분명히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가 '우방국의 지도자'인지 '테러국의 동지'인지 명확한 답변을 원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설마 후자일 리 없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실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5/13 동아】

논리 전개에 무리가 있다.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과 ‘테러국의 동지’가 동일시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설마 후자일 리 없기 때문에’는 ‘노 대통령이 테러국의 동지는 아니기 때문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동안 테러국의 동지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이었다’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전에는 테러국의 동지쪽이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실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고 해서 어떻게 ‘테러국의 동지’가 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런 논리적 비약을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노 대통령이 설마 후자일 리가 없기 때문에’라고 규정하였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지만 최전장관의 말투는 평생을 교단에 봉직해 온 교사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해양분야의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교사들에 대한 훈계조 발언을 한 것부터 그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중략) 일국의 장관으로서 충성의 발로였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만 끼친 셈이다.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됐다고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소신과 비전 제시보다 시도 때도 없는 '튀는 발언'으로 뉴스메이커가 된 최전장관이다. 현 정권 '코드인사'의 폐해를 말해주는 것인지, 개인의 자질문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인사권자인 대통령부터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10/3 경향】

‘소신과 비전 제시’를 하지 않고 ‘튀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것과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은 별상관이 없다.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됐다고’ 부분은 없는 게 낫다. 굳이 살리려면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면서’ 정도가 좋을 것이다.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면 의당 소신과 비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튀는 발언’을 했음을 질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됐다고’를 고스란히 살리고자 한다면 그 튀는 달라져야 한다. 그 튀는, 장관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돗물은 100% 안전하니 마셔도 된다"고 시민을 설득해왔다. 그리고 매년 수돗물 홍보비로 10억원 이상씩을 써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뒤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돗물 대신 생수를 사다 먹고 정수기로 물을 걸러 마셨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시민을 속이고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10/10 경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과 ‘공복인 공무원들이 시민을 속이고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 최소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가 아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거니와” 또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라고 해야 덜 어색하다. 그렇더라도 속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속담을 골랐어야 했다.

민주당은 박주선 의원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내심 바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행 소선거구의 고수를 생각하는 민주당 사이에 생각이 일치하는 등 큰 틀부터 잡아가야 선거구 획정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집안내 선거구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4 조선 조희천]

접속 어미 ‘-으나’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뚜렷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생각이 일치하는 등 큰 틀부터 잡아가야’에서 ‘일치하는’에 문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생각을 일치시키는 등’ 또는 한결음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는 등’ 정도가 더 나올 것이다.

송씨는 "열흘 전쯤 빠짱꼬장에서 재미삼아 해본 적은 있다"며 도박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처음 갔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해명대로라면 송씨는 빠짱꼬장에도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내 드래건 힐 호텔에 별도로 있는 빠짱꼬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군부대 도박장을 들락거리는 한국 국회의원을 미군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봤을까. [10/28 경향]

기사에 따르면 송 씨는 원래 빠짱꼬장에는 드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다. 그런데 뒤늦게 ‘처음 갔다’며 사과했다 그래서 빠짱꼬장에도 드나들었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영내 드래건 힐 호텔에 별도로 있는 빠짱꼬장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왜 이같은 추론이 성립되는지 알 수가 없다.

설의원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도 하거니와 폭로 때의 당당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기 바란다. 김 전 비서관은 설의원의 법정 진술을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이긴 하나 설의원에게 일임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많은 의심을 자초할 것이다. [3/29 국민]

설 의원이 근거가 확실치 않으면서 상대당에 관한 의혹을 폭로하

여 문제가 된 사건에 관한 논설이다. 왜 설 의원에게 ‘폭로 때의 당당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기 바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설 의원의 폭로 내용이 사실임을 사설의 필자가 확신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논설에서 설 의원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현대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무기상 김영완씨의 100억원대 '떼강도 피해사건'과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다. 설령 김씨가 국가 요직에 있던 사람이라 해도 경찰의 사건처리가 이처럼 온통 의문투성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6/28 세계]

‘설령 ..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상 김영완 씨는 국가 요직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가 요직에 있던 사람이나 일반 민간인이나와 경찰의 사건 처리 태도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경찰은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건교부 소속 항공담당팀의 현장 검증과 정밀 분석이 끝나야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평소 김 소장이 시속 150km 가량으로 저공비행을 자주했다”며 나무, 산 등 장애물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4/7 조선]

‘하지만’ 다음에는 앞 문장과 의미상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마땅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심스러운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 그러나 ‘하지만’을 쓰기에는 충분한 차이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도가 더 좋거나 아예 부사 없이 바로 연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과 ‘점치다’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가 더 낫다.

6. 모호한 의미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아예 머릿속에 뚜렷한 의미를 세우지 못한 경우, 의미는 바로 세웠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문장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경우로 크게 나뉜다. 모든 글은 필자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미 전달에 성공하지 못하는 글은 곧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필자가 아예 머릿속에 뚜렷한 의미를 세우지 못한 경우 문장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의미가 또렷하지 않으니 그것을 담은 문장을 읽는 사람은 더욱 뜻을 알 수 없게 된다. 필자의 머릿속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하나 필자가 그것을 온전한 문장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독자는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에 들어가게 된다. 추론을 통해 필자가 의도했던 바를 아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필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의도했던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필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의사 소통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아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독자는 추론을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하니 번거롭고 귀찮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 독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이 친척들에게 불효자나 패륜아 정도로 비취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중략)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의 연장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런 치료가 과연 효도인가 하고 묻는다. 그는 죽음이라는 자연의 한 과정을 받아들이며 운명하는 아버지의 그리운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한다. [11/11 중앙]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를 더 원한다는 뜻인 듯 보이는데 ‘아버지의 그리운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리운’은 걸릴 데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빼는 것이 좋겠다.

어떤 조직에서나 동종교배 인사는 조직을 병들게 한다. 상사의 눈치 보기만 성행하고, 하의(下意)는 없고 상의(上意)만 지배하는 경직된 조직이 된다. 노무현 정부가 왜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가. 여러 이유 중 인브리딩 인사, 이른바 코드 인사탓이 크다고 본다.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 해온 386 중심의 청와대 인사와 386적 마인드를 지닌 이른바 개혁코드 인사가 파정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 본다. [10/24 중앙]

‘단적으로’와 ‘시사하다’가 우선 어울리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은 이른바 개혁코드 인사가 파정에 이르렀음을 드러냈다’ 정도가 아닌가 한다.

이데올로기 코드가 맞는 끼리끼리 뭉칠 때 이 또한 이념적 동종교배

조직이 된다. 이런 이념적 결사체는 공성(攻城)에는 맞아도 수성(守城)에는 맞질 않는다. 반독재.반체제에는 맞지만 국정운영에는 무력하다.

왜 유방이 황제에 오른 후 그의 가신을 몰아냈는지, 왜 빌 클린턴의 아칸소 사단이 집권 후 지리멸렬했는지 동서고금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10/20 중앙]

‘유방이 황제에 오른 후 그의 가신을 몰아내고, 빌 클린턴의 아칸소 사단이 집권 후 지리멸렬한 것과 같은 동서고금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란 이런 이념적 결사체가 수성, 즉 국정 운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태풍이 오키나와 지역을 스쳐간 일본과의 평면 비교에는 물론 무리가 있지만, 인명 피해만 봐도 일본쪽은 순간풍속이 더 컸음에도 사망 1명, 부상 90여명에 그쳤으나, 우리나라는 14일 현재 사망·실종만 100명을 훨씬 웃돈 것으로 집계돼 엄청났다. (중략) 그 원인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이려는 인간 노력의 차이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9/15 한겨레]

마지막 문장은 ‘인간의 노력의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로 끝난다. 그런데 무엇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맥락을 통해서 ‘일본의 피해 규모에 비해 한국의 피해 규모가 큰 이유’임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것은 인간의 노력이 일본에 비해 미약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똑같이 불가피한 자연재해지만 피해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피해를 줄이려는 인간 노력의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결국 정확하게 말하려다 보면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것을 피해 짧게 줄이려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생겨난다.

이 비디오가 입수되고 방영된 시점의 선택과 그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사람 후세인 폭압정치의 종식을 내걸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두둔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11/22 조선]

‘이 비디오가 입수되고 방영된 시점의 선택과 그 배경은 알 수 없으나’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이 비디오가 입수되고 방영된 시점의 선택은 알 수 없으나’가 말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다. ‘비디오가 방영된 시점’은 선택할 수 있어도 ‘비디오가 입수된 시점’은 선택할 수 없다. 방영 시점은 늦추고 당길 수 있지만 입수 시점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입수와 방영은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비디오가 언제 입수되었으며 왜 그 시점에 방영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라야 한다.

상명하복 조항의 폐지는 검사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수사와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에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검찰청법에 신설하는 것은 검사의 독자성을 상당히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 개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사권을 비롯해 통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탄탄한 피라미드형 조직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검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검찰 스스로 바뀌는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8/16 대한매일]

맨 마지막 문장이 문제다.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최소한 ‘바뀌는’을 없애서 ‘검찰 스스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해야 문법성이 확보된다. ‘바뀌는’을 살리려면 ‘검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만으로 끝내야 할 것이다.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차량제공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까 생각하면 **불길함은 당장 현실로 다가온다**. 일각의 지적처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예상자나 희망자들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 특보명함을 준 것이라면 이들에게 품위유지비용 외에도 정치자금까지 부담이 될 것이다. [5/19 동아]

‘불길함은 당장 현실로 다가온다’고 되어 있는데 ‘불길함’이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아마도 필자가 의도한 바는 ‘이들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할지 당장 불길한 느낌이 든다’ 정도가 아닌가 한다.

먼저 SK 비자금 진상부터 규명한 연후 고해성사를 하든, 특검을 통해 대선자금 전모를 규명하든 정치개혁을 위한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받는 것**밖에는 묘책이 없다. [10/25 경향]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받는’ 방법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글이다. 그런데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국민들의 사면을 어떻게 단호한 의지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사면해 줄지 여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지 사면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구하는’ 또는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호소하는’이라면 좀더 나아진다. 나아가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노사대립 과정에서 빚어지는 **폭력시위는 이제 경찰도 외면할 만큼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11/24 조선]

우선 ‘폭력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다. 보통 ‘자리잡다’는 긍정적 현상을 가리킬 때 쓰는데 ‘폭력시위’는 그런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없다. ‘경찰도 외면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경찰이 폭력시위를 외면한다면 경찰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워낙 폭력시위가 잦아서 경찰이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겨운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은 된다. 그렇다면 ‘폭력시위는 이제 경찰도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정도가 낫다고 본다.

문제는 이 와중에 충청권 주민들이 거래허가지역 지정 등으로 입을 재산권의 실질적 손실과 만일 그 이후 일이 빚나갔을 때 갖게 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이 오리무중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나라는 어떤 낭비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공약**을 두고 지역끼리 대결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11/25 조선]

‘누구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공약’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 우선 ‘선거공약의 미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공약’은 ‘약속’인데 ‘약속의 미래’가 말이 잘 안 된다. 아마도 필자가 말하려고 한 뜻은 ‘누구도 그것이 실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어떤) 선거공약 때문에 지역끼리 대결하고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은 그 뒤 고문경관 5명이 모두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로써 당시 판검사들이 접견을 막고 고문을 묵인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사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공인됐다. 또 막다른 위기에 몰린 군사독재 정권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공 조작' 사건을 사법적으로 훌륭하게 뒷받침해준 것이기도 했다. [9/17 한겨레]

‘이 사건’이란 민청련의장 김근태 씨를 고문하여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 이하의 문장이 그 앞 문장과 의미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 판검사들이 고문을 묵인한 행위를 비난해 놓고 이어진 문장에서 ‘용공 조작’ 사건을 사법적으로 훌륭하게 뒷받침해주었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훌륭하게’란 말이 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훌륭하게 뒷받침했다’는 말은 ‘용공 조작’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남북간에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돼 인수인계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점도 있다. [1/24 문화]

‘인수인계적 현실’이 무슨 뜻인지 분명치 않다.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실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러나는 김대중 정부나 새로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인수 인계 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켜 경기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1/7 문화]

‘경기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아마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하고’ 정도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현 김각영총장은 재임2개월째다. 특별한 인사사유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 당선자측근이 진퇴를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당선자는 주위의 언급이 권·검유착 유전을 바라는 내심의 표출이라는 만일의 의심까지 경계하기 바란다. [1/8 문화]

‘주위의 언급이 권·검유착 유전을 바라는 내심의 표출이라는 만일의 의심’이 무슨 뜻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우선 ‘유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그렇게 퍼뜨림’이라는 뜻의 ‘유전’(流傳), ‘물려받아 내려옴. 또는 그렇게 정함’이라는 뜻의 ‘유전’(遺傳), ‘이리저리 떠돌음’이란 뜻의 ‘유전’(流轉) 중에서 첫 번째 ‘유전’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선자는 주위의 언급이 권·검유착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내심의 표출이라는 의심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한다.

그런 마당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에서 여론을 타고 크게 번져 북한의 비참한 현실이 여론화되고 북한동포를 질곡에서 해방시키려는 국제적인 압력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일 것이다. [11/22 조선]

‘비참한 현실이 여론화되고’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좀 길어지더라도 ‘비참한 현실이 널리 알려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 역시 압축해서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원은 김원기 당 의장이 당내 일부 소장파들을 '돈키호테과(科)'라고 비판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20일 다시 침묵에 들어갔다. 당 의장 직·간선제 문제로 김 의장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약속된 언론과의 인터뷰도 취소했다.

정 의원은 “어른(김 의장)을 한번 만나 봐야겠다” “열린우리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김 의장을 우산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했다. [11/21 조선]

‘김 의장을 우산으로 모시고 가겠다’에서 ‘-으로’의 의미가 모호하다. ‘김 의장을 우산쪽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것인지 ‘우산을 씌워서’, 즉 각별히 대접해서 모시고 가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아마 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같은 표현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우산과 관계된 무슨 일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한 나라의 방송문화 수준을 대변하는 공영방송이 방송 개방 시대에 경쟁력을 기르기는커녕 고민도 하지 않고 손쉽게 남의 것을 베껴서야 그 체면과 자존심을 어디 가서 말하겠는가. 당장 공영방송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편향된 정치 이념의 전파가 아니라 영국 BBC처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11/17 조선]

‘손쉽게 남의 것을 베껴서야 그 체면과 자존심을 어디 가서 말하겠는가’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어디 가서 말하겠는가’는 의미상 별로 자연스럽지 않다. 체면과 자존심은 원래 적극적으로 남에게 가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내 반미감정의 확산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3만7천명의 전사자를 낸 한국전 참전이 한국에서 평가절하되고 주한미군은 구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 누가 자식과 형제를 보내려 할 것인가.

유엔의 깃발을 들면 파병의 명분은 금상첨화가 된다. 그 정도면 이

라크에 가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깃발이 없어도 대의는 뚜렷하다. 이라크 재건은 후세인 정권의 잔인한 공포정치와 결별하는 새로운 민주역사의 시작이다. 화려한 설득력을 갖춘 명분이다.

【9/24 중앙】

‘유엔의 깃발은 파병이 명분을 얻는 데 금상첨화이다’ 정도의 문장이 ‘유엔의 깃발을 들면 파병의 명분은 금상첨화가 된다’로 나타났다. 있는 그대로로는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 1백50억원이 김영완씨가 강탈당한 1백억원대의 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현대 측은 1백50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박지원씨에게 제공했으며朴씨는 이를 김영완씨에게 돈세탁을 맡겼다는 것인데,朴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이 돈의 상당부분이 민주당 총선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호남민심을 빙자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 정쟁 차원으로 몰아가 흐지부지하려는 세력에 현혹돼선 안 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누군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빙자해 떡고물을 챙겼거나 정치자금으로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사건이기 때문이다. 【7/1 중앙】

‘민주당은 호남민심을 ...’ 문장은 너무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빙자하거나’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거나’에 접속되는 성분이 ‘흐지부지하려는’인지 ‘현혹돼선’인지가 분명치 않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뜻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감안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중 제한된 단체교섭에 대해 주목한다. 단체 교섭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인사, 예산등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1/25 문화]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단체교섭권은’이 주어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체교섭권은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가 무슨 뜻이냐이다. 특히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초점이다. 공공의 이익이 변화의 흐름이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변화의 흐름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반전을 의치면서도 북한의 핵 공갈은 외면하는 모순 투성이의 친북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꿈꿀 수 없는 시대적 지혜와 상상력이었다. [9/24 중앙]

‘시대적 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대에 관한 지혜’라는 뜻인지 ‘우리 시대의 지혜’라는 뜻인지 알기 어렵다.

집권 초 '재벌 개혁'이란 당면 과제와 함께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란 화두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신용불량자가 삼백만을 넘고 절망의 자살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건만 분배와 성장의 균형은 재벌 개혁과 함께 구호마저 사라진 반면, 그 자리에 '국민소득 2

만달러 시대'가 대신 들어앉았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시대처럼 성장주의로 선회한 참여 정부의 이런 변화에 조중동에 빚진 게 많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될까. 이처럼 노정권과 조중동은 현상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싸우지만 본질에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여론형성자와 정책결정자로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인 것이다. [8/24 한겨레]

의미가 모호한 것은 압축해서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에 생략이 지나쳐서이다. '성장주의로 선회한 참여 정부의 이런 변화에 조중동에 빚진 게 많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될까.'는 '성장주의로 선회한 참여 정부가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조중동에 빚진 게 많아서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될까.'이 변한 게 아닐까 한다. 문면 그대로 놓고 보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에 -에 빚진 게 많다'의 구조는 가능하지 않은 구조이다.

7. 모호한 지시

지시어를 쓸 때에는 지시 대상이 명확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시어가 있지만 그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전체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의 머릿속에만 지시 대상을 알 수 없고 독자들은 알 수 없다면 그 지시어는 잘못 쓴 것이 된다. 간혹 신문 사설, 칼럼에서 그와 같은 지시어 사용의 예가 발견된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 피해 양상을 되돌아 볼 때 초기 자연 재난적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피해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도가 없다.

이참에 불가피한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낡은 재난 관련 규정 개정 등 방재 시스템의 보완이 급선무로 꼽힌다. 이는 본질적 재난 원인의 규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9/15 한겨레]

‘이는 본질적 재난 원인의 규명을 가로막는’에서 ‘이는’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얼른 파악되지 않는다. ‘낡은 재난 관련 규정’인지 ‘보완이 요구되는 방재 시스템’인지 분명치 않다. ‘낡은 재난 관련 규정’이든 ‘(보완이 필요한 허술한) 방재 시스템’이든 그것이 본질적 재난 원인의 규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낡은 재난 관련 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허술한 방재 시스템’은 재난 원인의 규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재난 예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피해규모에서 우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너무 컸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인구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만 1000만가구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 나라가 이 정도의 사이버테러에 무방비로 당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본 인터넷 쇼핑몰과 PC방 업체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기술의 유비무환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1/27 문화]

‘이렇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손해를 본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다. 소송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게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곧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되기는 어렵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

해 '구원할 길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는지 검증이 안되는 북한 내부 사정과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복송하는 조치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인도주의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인권문제 제기 배경을 설명한다. (중략) 따라서 이 문제의 국제적 쟁점화는 불가피하고 핵 문제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 또한 크다. 한국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정부는 그간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이었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김대중 정부시절엔 더 심했다. 그러기에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요즘의 국면이다. 그렇더라도 우선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비정부기구나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 등 우회적인 방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며 한국의 NGO에 25만달러를 지원한 것이 좋은 선례다. 북 지도부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만 할 일이 아니다. 더욱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기 전에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6/26 세계】

'그러기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 정부가 그간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이었던 것을 가리키는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엔 더 미온적이었던 것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이 것이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의아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인지 북한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의 생략된 주어가 한국 정부이든 북한이든 논리적으로 연결이 매끄럽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벤 면

III. 문법

비면

III. 문 법

문법면에서 문제 있는 문장을 굳이 분류해 보자면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유형 : 문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짐작할 수 있음.

B 유형 :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짐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

C 유형 : 문법적으로 완전하지만 문면 의미와 필자의 의도가 다름. 다른 해석을 유발함.

개념상으로는 A, B, C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예를 놓고 보면 A, B, C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A의 경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뜻이 짐작되거나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야 하므로 독자를 힘들게 한다. 그 점이 문제이다. B와 C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1. 성분 사이의 호응

문법성을 갖춘다는 것은 문장 성분들 사이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문장 성분들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법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은 결국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한다. 문법적인 문장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다.

더구나 이기명씨 용인땅 매매사건은 제2의 옷로비 사건으로 비교되고 있다. [6/9 세계]

두 가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나는 ‘이기명 씨 용인땅 매매 사건’이고 다른 사건은 이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옷로비 사건’이다. 그런데 ‘제2의 옷로비 사건으로’와 ‘비교되고 있다’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의 옷로비 사건’을 살리려면 ‘이기명 씨 용인땅 매매사건은 제2의 옷로비 사건이다’ 또는 ‘이기명 씨 용인땅 매매사건은 제2의 옷로비 사건이라 불리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비교되고 있다’를 살리려면 ‘이기명 씨 용인땅 매매사건은 옷로비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끝난다 해도 조속한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일본 경기 침체가 여전히 세계 시장의 수요 회복에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전후 북한 핵문제와 함께 주한 미군 철수나 재배치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늘면서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외에도 한·미 공조를 통한 한반도 안보를 더욱 확실히 다져놓아야 한다. [3/22 국민]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 외에도’가 걸릴 부분이 없다.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정도로 바꾸어야 연결이 자연스럽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직접적 계기는 LG카드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LG그룹이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1/24 조선]**

‘직접적 계기는’은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직접적 계기는’을 살리려면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를 바꾸어야 하고,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를 살리려면 ‘직접적 계기는’을 바꾸어야 한다.

‘직접적 계기는’을 살린다면 이어지는 말은 ‘채권단과 LG그룹이 벌여온 벼랑끝 싸움이다’가 되어야 한다. 원래 ‘계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뜻하는 말로 비교적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문장 끝을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하려면 주어는 달라져야 한다.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와 호응할 수 있는 말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직접적 이유는’ 정도이다. 따라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직접적 이유는 LG카드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LG그룹이 벼랑끝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글은 이렇게 계속된다: "칠레는 혁명이 별로 없었으며,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정부들을 가졌던 오랜 역사의 나라다. 작은 대통령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은 두 명뿐이었다."

그 하나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로 사망한 살바도르 아옌데였다. 지난 추석 문득 그의 30주기가 떠올랐다. 쿠데타에 뒤따른 피와 살육의 제전 얘기를 요행히 몸을 피한 칠레 학생들에게서 들으면서, 서슬 푸른 긴급조치 아래 데모하면 사형이었던 당시 내 조국의 독재와 탄압에 서린 서러운 기억 때문일지 모르겠다. [9/18 중앙]

‘...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내 조국의 독재와 탄압에 서린 서러운 기억 때문일지 모르겠다’와 같은 구조에서 ‘들으면서’가 걸릴 데가 없는데다가, ‘때문일지 모르겠다’에 호응할 성분 역시 없다. ‘지난 추석 문득 그의 30주기가 떠오른 이유는’ 정도이리라 보이는데 그렇다면 ‘... 얘기를 들으면서’는 걸릴 데가 없다. 빠져야 하겠다.

현지에서 유언비어가 여전한 점도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분명치 않으니까 이처럼 사태가 꼬이고 진정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전력할 일은 이제라도 지역개발 청사진을 서둘러 부안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는 확신을 분명히 심어주는 것이다. [7/28 중앙]

‘부안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없다. 핵폐기장 건설이라 추정엔 되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찾아지지 않는다.

악수(惡手)에 대한 악수 대결은 총선을 앞둔 대통령 중간평가로 정치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것이다. 어느 당이 이기고 지든 총선이 대통령 중간평가로 조기에 좁혀질 때 한국정치는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말려들 게 분명하다. [9/4 중앙]

‘악수에 대한 악수 대결은 총선을 앞둔 대통령 중간평가로’가 걸릴 데가 마땅치 않다.

그런 가운데 여당 대표 자신이 흑색자금 수수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불법 대선자금 시비를 자초했다. 또 굿모닝 비리혐의자 명단을 청와대 비서관이 흘렸다는 의혹도 터졌다. 여권이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정치권의 물갈이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선자금 여야 동시 공개 주장이 나왔다는 관측도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386세대 실세라는 중간 당직자의 가당치 않은 세대혁명론 인터뷰 기사까지 가세하자 정계 대개편 음모론이 힘을 얻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7/22 중앙]

‘대통령의 대선자금 여야 동시 공개 주장이 나왔다는 관측도 나온다’로 끝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측은 특검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데 비해 한나라당 측은 1백50억원의 세탁을 주도한 김영완씨가 강탈당한 1백억원대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면 침예하게 맞서 있다. [7/7 중앙]

‘-에 대해서도’를 살리려면 ‘-에 대해서도 수사해야’가 되어야 할 것이고, ‘포함해야’를 살리려면 그냥 ‘-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갔었다는 사실을 속이기 까지 하고 있다. [10/5 한국]

‘얼마나’를 살리려면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를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고 '사실을'을 살리려면 '그는 지금 자신이 ...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들 대통령은 남북문제가 자주.민족의 문제만이 아닌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던진다는 점을 잘 알고 대처했다. [12/3 중앙]

'이들 대통령은 남북문제가 자주,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던진다는 점을 잘 알고 대처했다'라고 해야 한다.

주민들로부터 린치를 당한 뒤 어찌 군수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모른 척하느냐는 부안 군수의 하소연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일 뿐이다.

'어찌 군수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모른 척하느냐고 한 부안 군수의 하소연이'라고 해야 뜻이 명료해진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대안으로 판교 신도시를 만들자면 각 부서의 대책을 종합하고 협의하며 교육부총리는 뭘 말고 재정부.건교부는 뭘 해야 하는지 교통정리를 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9/25 중앙]

'집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그 대안으로 판교 신도시를 만들자면'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것은 바로 대학사회에서였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

은 6년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가해교수에게 5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비로소 정립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9/5 한겨레]

‘이때부터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비로소 정립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에서는 ‘계기가 되기도’의 주어가 없다. 따라서 ‘계기가 되기도 했다’를 버리고 그냥 ‘이때부터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비로소 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문장 앞 부분에 있는 ‘이 사건은’이 ‘계기가 되다’의 주어가 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 사회에서 ‘초고속 승진’한 직업 중 하나가 노조 단체 간부라는 화두로 말을 시작한 이 공무원은 이제 각종 사회 갈등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 기관을 찾는 민원인들 중 대부분은 적어도 국장급 심지어 장·차관급부터 만나겠다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냈다. [11/24 조선]

이 문장에는 ‘민원인들 중 대부분은 장차관급부터 만나겠다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의 구조가 들어 있는데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민원인들 중 대부분은 장차관급부터 만나겠다고 요구한다’라고 하든지 ‘민원인들 가운데는 장차관급부터 만나겠다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또는 ‘민원인들은 장차관급부터 만나겠다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은’과 ‘비일비재하다’가 비슷한 뜻의 말인데 중복되어 있어서 호응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방부는 왜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한·미 협상에서 연합사와 유엔사가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그간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편 데는 서울에 미군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대북(對北) 억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상징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투자자들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11/26 조선]

‘이런 입장을 편 데는’과 호응하는 말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입장을 편 데는’을 살리고 뒤의 말을 바꾸는 것과 ‘이런 입장을 편 데는’을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와 호응할 수 있는 말로 대치하는 것이다.

전자라면 ‘그간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편 데는 서울에 미군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대북(對北) 억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상징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후자라면 ‘그간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편 것은 서울에 미군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이 그 자체로 대북(對北) 억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상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도가 좋겠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 두 정부는 자신들이 예측 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대목에서 느끼게 한 회의였다. [11/18 조선]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는’에 바로 이어 ‘한미 두 정부는’이 나와 ‘-는 -는’의 구조를 보인다. 이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한미 두 정부는’은 ‘한미 두 정부가’로 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움직이고’, ‘되돌아볼’,

‘느끼게’가 모두 ‘두 정부’를 주어로 하고 있어서 해석하기 힘들게 한다. 세 동사 가운데서 ‘느끼게’의 주어는 반드시 ‘한미 두 정부는’ 일 필요는 없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1심에 비해 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의 경영판단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사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존중하되 구체적인 법리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21 조선]

‘대폭 줄어든 것은 ... 안 된다는 점을 사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안다’의 구조인데 ‘안다’보다는 ‘본다’ 또는 ‘보인다’가 더 낫다. 또는 “‘1심에 비해 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의 경영판단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사법부가 수용한 것’이라면서’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도 정부의 파병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같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분위기이다. [11/24 조선]

‘어느 당도 ...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에서 ‘상황으로 가다’의 주어가 무엇인지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어느 당도 정부의 파병안에 대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으로 바꾸면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폭력시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부안 사태와 민노총.농민들의 가투(街鬪) 행태는 국가 공권력이 지금 어

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11/24 조선]

‘사태와 ... 행태는 ...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가 아니라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고 말았다’라고 해야 말이 된다.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거나 ‘국민’ 정도일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수거물폐기장 설치를 **둘러싼** 정부와 불안군민이 충돌중인 ‘부안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어설픈 낙관주의, 선부른 오판의 연속이 화(禍)를 키웠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1/22 조선]

‘둘러싼’과 호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둘러싼’을 ‘둘러싸고’라고 바꾸면 ‘둘러싸고’가 ‘충돌중인’과 호응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뚜렷해진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당초부터 백지화 외에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략을 구사해 왔다.** [11/22 조선]

두 가지 점에서 어색하다.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과 ‘전략’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관철하겠다는 전략’ 또는 ‘관철하려는 전략’이 적절하다. 다른 하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이다. ‘전략’은 구사하기보다는 펼치거나 쓰는 것이다. ‘구사하다’는 ‘전략’보다는 ‘작전’이나 ‘전술’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이를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관철하겠다는 기본 전략을 펼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지난 9일 민노총 서울 도심 시위를 시작으로 과격시위 양상을 띠면서 부상하는 전경들도 속출하고 있다. [11/22 조선]

‘양상을 띠면서’의 주어가 없고 ‘서울 도심 시위를 시작으로’와 호응할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9일 민노총 서울 도심 시위부터’라고 바꾸면 나아진다.

검찰은 최근 수사 확대와 함께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 시작한 계좌 추적의 범위도 정.재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11/22 조선]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 시작한’은 자칫 ‘시작한’의 주어가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우리말에서 ‘-에서’가 주어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작한’은 ‘검찰이 추적을 시작한’의 구조에 들어 있다. 따라서 ‘시작된’이라고 하면 더 쉽게 뜻을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부터 시작한’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와 달리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서부터’가 되면 주어로 해석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이너스티는 최대 2억원짜리 현금박스 25개(50억원)가 쉽게 실렸으며, 약 500kg을 실은 채 실제 도로주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2 조선]

‘약 500kg을 실은 채’와 호응할 부분이 없다. 반드시 동사구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구가 없다. 따라서 ‘약 500kg을 실은 채 실제 도로주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약 500kg

을 실은 채 실제 도로 주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전체의 교통은 그 뒤로 시작됐다. [11/22 조선]

‘그 뒤로’와 ‘시작됐다’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 뒤로 시작됐다’보다는 ‘그 때부터 시작됐다’라야 더 자연스럽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학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반성해야 하며, 산업계의 애프터서비스와 리콜제도를 벤치마킹해 자신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육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21 조선]

‘자신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육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에서 ‘책임을 지는’이 어디에 걸리는지 분명치 않다. ‘자신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교육혁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자신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신이 배출한 인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로 끝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얼마나 노력했는가 반성해야’보다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가 더 자연스럽다.

청와대는 놔두면 사고 칠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 지난 역사의 경험이다. [11/17 조선]

‘경각심’을 수식하는 말이 ‘놔두면 사고 칠 대통령 측근들이 준비하

다는'인데 서로 잘 호응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놔두면 사고 칠 대통령 측근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는 '청와대는 놔두면 사고 칠 대통령 측근들이 즐비하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도가 더 낫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한국 투자를 검토 중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대한(對韓) 투자를 재고(再考)하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9 조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이 걸릴 말이 없다.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대한(對韓) 투자를 재고하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대한(對韓) 투자를 재고하거나, 투자하지 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이라야 한다.

한나라당이 **일주일간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연쇄 폭로전**을 예고했다. [11/19 조선]

'일주일간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연쇄 폭로전'은 '일주일간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연쇄 폭로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꾸어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일주일간의 연쇄 폭로전'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낫다.

광주사태니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다. [11/25 조선]

'광주사태니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는 '광주사태나 동학혁명에 비유하는 말이'로 고쳐 써야 한다. '광주사태니'를 살리려면 '광주사

태니 동학혁명이니 하는 비유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의원 대다수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입장이었다. 이들의 반대 이유엔 수도 이전의 비용과 효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수도의 적지(適地) 여부 등 여러 논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사적, 국제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로 각인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적 확신이라고 하겠다. [11/25 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은 앞 문장에 비추어 볼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대 이유는’으로 해석된다.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대 이유는 심정적 확신이다’가 되는데 ‘심정적 확신’이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심정적 확신’에서 ‘심정적 확신’은 뜻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대 이유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로 각인된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 득표용으로 던져진 선거 공약 때문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 금융은 왜 지기만 할까. 재계는 대기업(재벌)이라는 경쟁력있는 선수에 정부가 족쇄를 채웠다는 이유를 든다. [11/25 조선]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 금융이 왜 지기만 하는지’ 그 이유가 바르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계는 대기업(재벌)이라는 경쟁력있는 선수에 정부가 족쇄를 채웠다는 이유를 든다’가 아니라

‘재계는 대기업(재벌)이라는 경쟁력있는 선수에 정부가 족쇄를 채운 것을 이유로 든다’라고 해야 한다.

애초 '60대 용퇴론'으로 시작된 한나라당 안의 갈등이 영남지역 물갈이론을 거쳐 지난 4일 의원연찬회를 계기로 '5·6공 청산론'으로 발전했다. 특정비리 관여자, 고령자 등과 함께 특히 5·6공 출신이 청산 대상으로 공론화한 것은 시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9 한겨레]

문면 그대로 놓고 보면 ‘청산 대상으로 공론화한’ 주체가 ‘5·6공 출신’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5·6공 출신은 청산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공론화한 것은’은 ‘공론화된 것은’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서 국회의 해임 건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하고 정국이 시끄러워질 염려가 있어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는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국회 결의'란 이름으로 힘을 마구 휘두르면 국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질 뿐더러 삼권분립 정신도 훼손된다. [9/8 한겨레]

문면 그대로 놓고 보면 ‘최소한’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전체에 걸린다. 그러나 글쓴이의 의도는 달라 보인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함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이 아니라 ‘최소한의’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전경련이 이런 결의를 하고 나선 데는 최근 현대 비자금과 에스케

이해운 비자금 파문 등으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직접적 배경이 됐을 것이다.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물론, 기업인이 직접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무언가 내놓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을 터이다. [9/6 한겨레]

‘국민들의 지탄은 물론’이 어디에 걸리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좀 길어지더라도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 정도가 좋지 않을까 한다.

법에는 위반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 규정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동안 기록물 무단 폐기에 따른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9/5 한겨레]

‘기록물 무단 폐기’는 일종의 범법 행위이다. ‘~에 따른’을 쓰려면 ‘기록물 무단 폐기’라는 범법 행위에 자동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록물 무단 폐기’라는 범법 행위가 있어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기록물 무단 폐기에 따른’은 적절치 않다. ‘기록물 무단 폐기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진 적이’ 또는 ‘기록물 무단 폐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진 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서술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 통과 이틀만에 파병을 결정했다. [10/20 경향]

‘유엔 안보리에서’ 걸릴 데가 없다.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파병을 결정’한 것이 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에’라고 하든지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 이틀만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노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기는커녕 **동업자라느니, 안타깝다면서** 감싸고 돈 사람이 누구인가. [10/20 경향]

‘동업자라느니 안타깝다느니 하면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업자여서 안타깝다면서’라고 해야 한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느니’는 연거퍼 나란히 쓰는 것이 정상적이다.

장관, 수석들이 일개 비서관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다면** 국정이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 없다. [10/20 경향]

‘급급하다’는 보통 ‘-기에 급급하다’, ‘-에 급급하다’ 꼴로 주로 쓰이고 ‘-려고 급급하다’도 되는 것으로 국어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국어사전에는 ‘-느라 급급하다’와 같은 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어사전대로 쓴다면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면’,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면’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느라’를 살린다면 ‘눈치를 보느라 일을 바로 처리하지 못했다면’ 정도로 할 수 있다.

‘-느라 급급하다’와 같은 용례는 이밖에도 더 있다.

한투.대투의 해외매각으로 치르게 될 기회비용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처리를 마냥 미뤄서도 안되겠지만, 현투처럼 원매자를 **찾느라 급급하다** 헐값으로 팔아도 안된다. [11/26 경향]

한 미술계 관계자는 "올 베니스 비엔날레 자체가 설치나 미디어보다 회화의 비중을 늘렸는데 유독 한국관만큼은 거의 매회 설치작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서구 미술의 아류를 따라잡느라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한국적 정체성과 자신감을 대표하는 회화나 사진 등 평면 작가에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6/27 동아]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은 단위노조 투쟁을 지원하느라 급급했지만 앞으로 총연맹은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보장, 법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24 문화]

이러한 예들은 ‘급급하다’가 ‘-느라 급급하다’와 같은 용법도 있음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진다. 오용이라고 해야 할지 새로운 용법의 탄생이라고 봐야 할지 검토를 요한다.

한국 레슬링의 유망주가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데에는 전북도 레슬링협회와 감독 등 어른들의 뼈아픈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 [10/14 경향]

‘레슬링의 유망주가 ... 세상을 떠난 데에는 ... 어른들의 뼈아픈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와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세상을 떠난 데에는’을 ‘세상을 떠난 데 대해’로 바꾸는 것이 낫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반드시 걷어내야 하지만 시장 자체의 연착륙 또한 중요하다.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이 챙기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만한 비책을 내놓는다면 집값은 저절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10/14 경향]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만한 비책을’보다는 ‘불로소득을 철저

히 환수할 수 있는 비책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또는 '불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비책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는 법률상 제약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바뀌지 않았고, 판례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도 유효한 상황이다. [3/22 국민]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가 이루어지려면 법률상 제약이 풀려야 한다. 그런데 문면은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 법률상 제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상 제약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가 아니라 '법률상 제약이 풀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에는 법률상 제약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나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를 가로막는 법률상 제약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로 해야 한다.

앞 부분의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도 자연스럽지 않다.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는'으로 하든지 '문제는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배자 특사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는 법률상 제약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새 정부 각료들의 설화가 잇따라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중략) 노무현 대통령이 "적당치 않다"고 진화해야 할 만큼 파장이 커진 것이다. 예술인 출신 문화분야 수장으로서 참신한 비전을 기대했던 국민은 특히 자신이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다는 이장관의 발언에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3/19 국민]

'특히'가 어디에 걸리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

다. ‘국민은’에 걸리는 경우와 ‘자신이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다는 이장관의 발언’에 걸리는 경우이다. 후자로 봐야겠는데 그러자면 ‘특히’는 ‘발언에’ 다음에 놓이는 것이 좋다. 즉 ‘자신이 대통령의 ‘분신’이나 다름없다는 이장관의 발언에 특히’라고 해야 한다. 어쨌거나 문면 그대로만 놓고 볼 때는 문장이 중의적이다.

문제는 장관들의 구설이 개인적 망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전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번 파문을 통해 장관들은 공인(公人)의 말이 갖는 무게를 새삼 인식,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19 국민]

마지막 문장은 주어가 ‘장관들은’이므로 ‘한번 더 생각하기를 바란다’로 끝맺어야 한다. 장관들이 ‘계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를 살리려면 ‘계기가 되다’의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장관은’이 ‘계기가 되다’의 주어일 수는 없다. ‘계기가 되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파문이’이다. 결국 문법적으로 완전해지려면 ‘이번 파문을 통해 장관들은 공인의 말이 갖는 무게를 새삼 인식하고, 이번 파문이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야 한다. 이것으로 문장이 너무 길어진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기가 되기를’을 빼서 ‘장관들은 한번 더 생각하기를 바란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의 부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가맹점 수수료 인상도 가맹점의 가격인상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게 뻔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 수수료를 인하를 주장해왔던 것에 비하면 정부의 카드산업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18 국민]

‘...에 비하면’ 다음에는 전과 달라진 점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 주장해왔던 것에 비하면 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와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비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 수수료를 인하를 주장해왔던 것을 상기할 때 정부의 카드산업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도가 더 자연스럽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현직 검사의 과욕으로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숨진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건으로 담당 검사가 구속되고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옷을 벗었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협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몰카 제작 및 배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불거졌으니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중략)

우리는 이러한 수사 행태가 무소불위일 정도로 비대화된 검찰 권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거대한 칼을 잘못 휘둘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가 단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8/21 대한매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가 단적으로 입증된 것이다’는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 U대회를 남북간 화해협력의 장으로 삼고자 한 노 대통령과 정부의 충정을 이해한다. 북한은 U대회 불참 위협 말고도 4대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 교환과 제6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사전 접촉 등도 응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북의 속셈을 모르는 바 아니나, 6·15 공동선언의 실천과 남북경협 확대를 약속한 노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발표된 지 나흘만에 표류 위기에 봉착하는 일은 막아야 할 국가과제였다. [8/20 대한매일]

마지막 문장에서 ‘표류 위기에 봉착하는’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주어는 ‘대구 U대회’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경축사가 발표된 지 나흘만에 대구 U대회가 표류 위기에 봉착하는 일은 막아야 할 국가과제였다’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 강도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범행 권총이 부산 감천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8/19 대한매일]

‘범행 권총이 ... 필리핀에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가 아니라 ‘범행 권총이 ... 필리핀에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가 옳다.

동남아와 러시아의 선박이 많이 정박하는 감천항으로 외국 총기류가 감쪽같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8/19 대한매일]

‘항간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보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가 좀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마침 통일부가 대북투자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비상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손실보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8/18 대한매일]

발표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 될 수는 없다. ‘발표한 것’은 어떤 행동이고 ‘적절한 판단’은 머릿속의 뇌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발표한 것은 적절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든지 ‘발표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또는 ‘발표한 것은 적절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와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세정 당국이 강남지역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외에 건설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 것도 원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집값을 뺄뛰기하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8/18 대한매일]

위 문장에 문제가 없다면 ‘세정 당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은 건설업체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가 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정 당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은 건설업체가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는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가 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은행에서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가져가고 그것도 관리 소홀로 줄줄이 새나간다고 한다. 명색이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금융거래 내용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노출되도록 되는 일인지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5/20 동아]

‘명색이 민주국가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문법적이지 않다. ‘명색이 민주국가인 나라에서’라고 하거나 ‘명색이 민주국가인데’라고 해야 한다. ‘명색이 민주국가인 나라에서’를 줄여서 ‘명색이 민주국가에서’라고 흔히 하는 듯이 보인다. 언어는 습관이므로 줄여 쓰는 습관이 널리 퍼져 있다면 문제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한 수사권과 독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고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다는 것은 이 기관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무사안일에 빠져들게 한 요인이다. [5/15 동아]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다는 것은’보다는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는 것은’,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었던 것은’, 또는 ‘견제할 외부 기관이 없음은’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는 것이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윤리성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어렵다. [5/15 동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과 호응하려면 이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할 뿐 아니라 사건 처리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야 한다’가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는 일 못지 않게 사건 처리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를 둘러싼 비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문화일보는 인수위가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이후 이에 포함된 5대차별 해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오피니언 먼 포럼란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등 해법모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게 할 경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1/23 문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이 걸릴 데가 없다. 그렇다면 ‘느끼는 것은’을 빼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게 할 경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로 바꾸면 될 것이다.

엣그제 열린 청와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조폭 등 민생 침해사범의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강력 범죄 소탕 100일 계획"을 밝혔지만 범죄소탕에 시한이 있을 수 없다. 【6/19 세계】

접속된 앞뒤 문의 주어가 앞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처럼 ‘-은’ 조사와 함께 나타나고 뒤에서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처럼 ‘-이’ 조사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어색하다. 앞의 ‘노무현 대통령은’을 ‘노무현 대통령이’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2000년 부실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조흥은행에 대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6/19 세계】

‘노조의 주장대로라면’은 어딘가 불완전해 보인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대신에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 또는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이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또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2000년 부실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조흥은행에 대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가 아니라 ‘노조의 주장은 정부가 2000년 부실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조흥은행에 대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이면합의를 해놓고선 이제 와서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가 더 바람직하다.

사실은 ‘~의 주장대로라면’과 같은 표현이 신문에서는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

남북관계를 우리 법에 따라 다루지 않으면 무슨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인가. 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남한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이 '남북관계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내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북한

을 들락거리고 돈을 건네며 통일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고 만다. [2/6 조선]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8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어두운 경기를 거론하면서 위기를 확산시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며 "이는 경기상승을 지체시키고 경기하강을 촉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노 당선자 얘기대로라면 언론은 이런 지표를 모르는 체 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리고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일까. [2/10 동아]

왜 이런 표현이 신문의 글에서 유난히 즐겨 쓰이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가지 추론을 한다면 위 첫 예에서 '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은 '김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다음 예에서는 '노 당선자의 얘기대로 한다면'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인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각각 '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노 당선자의 얘기대로라면'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한국외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문제를 논의한 WMD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부장은 최근 한국은 제쳐둔 채 일본하고만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귀국해 버렸다. 대북 제재가 한국의사와 무관하게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담 하고 나면 탄소리하고,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한국외교가 국제적 "왕따"를 자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6/14 세계]

'정상회담 하고 나면 탄소리하고'와 접속된 부분은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이다. 그런데 '탄소리하다'는 동사이고 '유화적이다'는

형용사적이다. 따라서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은 ‘북한을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대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당정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상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농민 반발을 의식해 정치논리에 의한 몸사리기로 보인다.** [6/13 세계]

‘농민 반발을 의식해’가 걸릴 데가 없다. ‘농민 반발을 의식한’으로 바꾸든지 ‘농민 반발을 의식해 정치논리에 의한 몸사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원자력 이용이 주는 이익보다 만약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세계 6위의 원전운영국이면서도 이제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왔다. [7/16 중앙]

문면 그대로 보면 ‘국민은 그동안 원자력 이용에 따른 만약의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지, 원자력 이용이 주는 이익에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원자력 이용이 주는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익은 누리는 것이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 ‘국민은 그동안 원자력 이용이 주는 이익을 중요시하기보다 만약의 위험을 두렵게 여겼다’는 뜻이다. 원자력 이용이 주는 크나큰 이익을 생각하면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진작에 갖춰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동안 원자력이 가져다주는 이득에 주목하기보다는 원자력이 지니는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도가 더 명확한 표현이 아

닌가 한다. 이는 예문의 문장보다 더 길다. 결국 조금이라도 문장을 짧게 하려는 욕구에서 문제가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또 학과 단위로 경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연구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결국 대학의 학과 중심 이기주의 때문에 시행할 수 없었다.

이번 제안도 먼저서울대가 어떤 대학을 지향할 것인지 기본틀을 세우고, 학내 동의를 얻고,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7/22 중앙]

‘이번 제안도’가 걸릴 곳이 마땅치 않다. ‘이번 제안도’는 ‘이번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최씨의 해외도피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최규선씨가 ‘청와대측과 대책회의를 거친 최 총경이 자신에게 밀항을 종용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2/27 한국]

‘최규선씨가 ‘청와대측과 대책회의를 거친 최 총경이 자신에게 밀항을 종용했다’는 주장 때문이다’는 명백히 비문법적이다. ‘최규선 씨가’와 호응할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최씨의 해외도피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청와대측과 대책회의를 거친 최 총경이 자신에게 밀항을 종용했다’는 최규선 씨의 주장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최씨의 해외도피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최규선 씨가 ‘청와대측과 대책회의를 거친 최 총경이 자신에게 밀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최규선 게이트의 본질은 김 전 대통령 3남 홍걸씨가 관련된 각종비리다. [2/27 한국]

‘잘 알다시피’라고 하면 ‘누가’ 아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그렇다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와 같이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 아니면 ‘누구나 잘 알다시피’ 정도로 주어를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오작동이 잦았다면 그 자체도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을 믿고 지하철을 이용해 왔으니 그동안 무사했던 것만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2/25 한국]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것은 놓아 두고 오직) ‘그동안 무사했던 것만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그런 뜻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행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 무사했던 것만 다행으로 여겨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사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무사했던 것만도’나 ‘그동안 무사했던 것을’이라 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은 사전 검토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략)

내용으로만 말하자면 노 당선자의 그런 발언은 한 가지 견해로서 성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뜰이나 한미관계 손상을 걱정하고 새 정부의 대미관계 정립에 대한 고민들이 무성한 마당에 당선자 신분으로 꼭 그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노 당선자의 거듭된 발언은 그가 미국의 진의에 대한 매우 거친 가정을 사실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가졌다는 선언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마저 있다. [2/20 한국]

‘그가 미국의 진의에 대한 매우 거친 가정을 사실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가 어디에 걸려야 할지 불분명하다. 걸릴 데가 마땅치 않으면 차라리 빼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노 당선자의 거듭된 발언은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가겠다는 선언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마저 있다’가 되면 뜻이 분명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토지공개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주택거래허가제다. (중략) 이 제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식으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은 주거지 180㎡(55평), 상업지·녹지 200㎡, 공업지 66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한해 허가대상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실수요자인 경우에만 구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다. [10/14 경향]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식으로’가 걸릴 데가 없다. ‘이 제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이 제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여야(與野)도 투표율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로서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본질적 측면보다는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보는 쪽은 걱정, 그 반대쪽은 안심하고 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4/22 동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본질적 측면보다는’이 걸릴 데가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같은 본질적 측면을 걱정하기보다는’이라고 해야 완전해진다. 결국 ‘-을 걱정하기’를 생략한 셈인데 조금이라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욕구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무너진 셈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집권세력의 음모설은 정권말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YS(김영삼)정권 말엔 대선잔금 관리문제로 '음해세력'논란이 불거진 끝에 김현철씨가 구속됐다. DJ(김대중)정권 말의 술한 게이트 사건들도 검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 내 신.구파 간 음모설에 의해 증폭됐다.

음모는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퍼뜨리는 사람이나 대낮엔 정색을 하고 부인하는 게 음모의 특성이다. 좀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반격 성격의 '역음모론'이 나오고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멸하는 자해(自害) 바이러스다. [7/31 중앙]

‘좀처럼 ...’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자해 바이러스다’로 끝나기 때문에 주어가 필요하다. 주어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앞 문장들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음모는’이 주어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어를 살려서 ‘음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반격 성격의 ‘역음모론’이 나오고’라고 할 때에, ‘음모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는 어색하다. ‘음모론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라야 한다. 그렇다면 주어인 ‘음모론은’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문장도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멸하게 만드는 자해 바이러스다’라고 하든지 아예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멸한다’로 끝나든지 해야 한다. 결국 ‘음모론은 좀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반격 성격의 '역음모론'이 나오고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멸하게 하

는 자해(自害) 바이러스다'라고 하든지 '음모론은 좀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반격 성격의 '역음모론'이 나오고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멸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보면 그 정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 [1/2 문화]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보면’에 이어지는 말로는 ‘그 정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가 아니라 ‘그 정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가 자연스럽다. ‘알 수 있게 한다’를 굳이 쓰려면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은 그 정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한다’라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 잠재력을 가동해 국가 생산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1/8 문화]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대신에 ‘이 문제를 발전시키는 것은’이라야 한다. 서술어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과 ‘국가 생산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북측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남한 해군의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서해교전과 같은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6/4 세계]

‘남한 해군의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는 ‘남한 해군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라고 해야 ‘침범하고’의 주어가 살아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조작하려는 것이라고’의 주어

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짜 1면의 기사는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어선의 NLL 월선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고속정 출동과 관련, 남한 전함이 북측 영해를 연속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남한 군부가 서해교전과 같은 상황을 조작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6/4 세계】

결국 ‘남한 해군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서해교전과 같은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5억달러가 경협자금이었다면 북한 아태평화위와 현대간 세차례 비밀협상에 김대중 밀사인 박지원씨가 동석할 이유가 없었다. 북한의 10억달러 요구에 현대측이 난색을 표시하자 "(경협) 협상을 못 한다. 정상회담도 못 한다"고 정상회담과 직결시켰고, 결국 5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상회담 뒷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

DJ정권이 경협자금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배경은 5억달러가 "현대를 거쳐" 북한에 송금됐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광옥, 이기호, 박지원 등 당대의 실세들이 산업은행 대출을 주도했다면 그 돈은 정권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6/11 세계】

‘DJ정권이 경협자금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배경은 5억달러가 "현대를 거쳐" 북한에 송금됐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보다는 ‘DJ정권이 경협자금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5억달러가 "현대를 거쳐" 북한에 송금됐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편이 낫다. ‘배경’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자 한다면 ‘DJ정권이 경협자금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배경은 5억달러가 "현대를 거쳐" 북한에 송금됐다는 사실이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핵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그 자체에 따라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5/2 동아]

‘미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보다 핵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다’에서 비교의 대상이 무엇과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미국의 주된 관심이 북한의 핵 확산을 저지하는 데 있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있지 않다는 뜻인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더 친절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 박영숙 회장처럼 버려진 어린이와 입양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사회운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5/8 동아]

조사 ‘처럼’이 쓰였으므로 비교가 있어야 하는데 비교는 동질적인 것끼리 해야 한다. ‘박영숙 회장’과 대등한 요소가 없다. ‘사회운동’은 ‘박영숙 회장’과 대등한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 박영숙 회장의 활동처럼’이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양부모협회 박영숙 회장처럼 버려진 어린이와 입양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사회 운동가들의 활동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외면과 거둬진 실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 개방의 홍수 속에 익사할 처지에 놓여 있다. 농림부라는 일개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식량주권의 포기, 민족 생활의 문제로 불거졌다. [9/14 한겨레]

‘농림부라는 일개 부처가 감당할 수 없는 식량주권의 포기, 민족 생활의 문제로 불거졌다’가 뜻이 쉽사리 와 닿지 않는다.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태풍 피해와 관련해 그 인제적 성격을 애써 외면한 채 '수십년 만에 닥친 자연 재해'라면서 그 불가피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미흡한 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에 일방적 책임 미루기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 피해 양상을 되돌아 볼 때 초기 자연 재난적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피해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관리 소홀 등 인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9/15 한겨레】

‘자연에 일방적 책임 미루기’가 아니라 ‘자연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본다. ‘자연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자연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낫다.

따라서 재난 방지시설을 시급히 고도화하고, 낡은 방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9/15 한겨레】

‘재난 방지 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은 어색하다. ‘고도화’는 정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재난 방지 시설의 체계나 구조를 고도화’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택자금 부담이 전체 비용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집 마련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결혼비용을 부모에 의존한다는 것은 요

즘 젊은 세대의 독립심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9/20 한겨레]

‘결혼비용을 부모에 의존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의 독립심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결혼비용을 부모에 의존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의 독립심 부족을 보여준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국방비 우선순위가 천문학적 액수의 첨단무기를 사들이는 데 있는지, 군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9/25 한겨레]

우선순위란 비교 대상 사이의 상대적 순서이지 어느 하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천문학적 액수의 첨단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군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중에 어느 쪽에 국방비의 우선순위가 놓여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중략)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 윤 후보자는 자신이 감사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기존의 적발·문책위주 감사에서 성과평가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그가 감사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여길 만한 뚜렷한 결격사유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9/26 한겨레]

조사 ‘-는’이 두 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설득하는 데는’의 ‘-는’은 불필요해 보인다.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감사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설득하는 데는 별로 성

공하지 못했으나 다른 무엇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다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을 설득했다는 언급이 없으니까 문제다.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들의 소명의식과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해 실행을 선고하지 않은 점도 법원으로서의 고심어린 판결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9/27 한겨레]

‘법원으로서의 고심어린 판결임을’은 자연스럽지 않다. ‘법원으로서의 고심어린 판결을 한 것임을’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이 협상안 마련 등 다소 유연해진 것을 약해진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된다. [10/4 경향]

‘협상안 마련 등’은 걸릴 데가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미국이 협상안을 마련하는 등 다소 유연해진 것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때 북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비리와 결탁한 셈이 아닌가. [8/1 대한매일]

‘정무부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비리와 결탁했다’는 말이 잘 되지 않는다. ‘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고 비리와 결탁한’이라고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위한 전문기관과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언론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도’로 읽혀질 수 밖에 없다. [8/4 대한매일]

문면 그대로 놓고 보면 ‘언론을 상대로’는 ‘언급한’에 걸릴 수 있는데 ‘언론을 상대로 전문기관과 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언론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라고 해야 한다. 또 ‘언론과 일전불사의 의도’는 ‘언론과의 일전불사의 의도’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무엇보다 양국의 지도자가 새로 바뀐 뒤 처음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盧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다져온 한.중 양국 간 누적된 우의를 확인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큰 틀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시급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3 중앙】

‘시급한 문제는’에 호응하는 성분이 없다. 따라서 ‘시급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시급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합의이다’라고 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빠르면서도 폭넓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황기의 일시적인 과정이라기보다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구조적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제조업은 자꾸 해외로 옮겨가고 있으며, 산업이 첨단화.정보화될수록 인력 수요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결국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달려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머리를 싸매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25 경향]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또는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굳이 '달려 있다'를 살리려고 한다면 '해결 여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정책만으로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20여차례의 대책에서 확인된 바 있다. 수백조원의 투기자금이 떠돌며 세금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는 마당에 양도세나 보유세를 아무리 올린다 해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부동산자금을 자금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금융대책들이 나왔지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

여차하면 치솟는 집값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잡을 때는 지났다. 위헌 시비나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되도록 없어야겠지만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 [10/30 경향]

'여차하면'이 어디에 걸리는지 분명치 않다.

이전총재는 측근인 최돈웅 의원을 통해 SK에서 들어온 1백억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사전이든 사후든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 [10/31 경향]

'사전이든 사후든'이 걸리는 게 어디인지가 분명치 않다. 특히 '몰랐는지'에는 걸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전이든 사후든'을 빼서 '이 전총재는 측근인 최돈웅 의원을 통해 SK에서 들어온 1백억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책임

이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이 전총재는 측근인 최돈웅 의원을 통해 SK에서 들어온 1백억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사전에 알았는지 사후에 알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할 책임이 있다'가 필자가 원래 의도했던 바가 아닌가 추측해볼게 된다.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인물을 청와대가 **임명하려는** 것에 KBS노조는 물론 전국언론노련 한국기자협회 시민사회단체 등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25 국민]

'임명하려는 것에'이지 '임명한 것에'가 아니므로 '임명 철회'는 맞지 않다. '임명 의사 철회를 요구하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근거 없는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설이 자주 거론돼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25 국민]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는 어색하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가 낫다.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계획 역시 이러한 구도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국이 북한 공격 가능성**까지 추측해 걱정을 키울 필요는 없다. 지나친 불안감은 대내적으로 혼란과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외국인 투자 기피를 불러 국내외에서 위기설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3/26 국민]

'미국이'에 호응하는 말이 없다. 그러다 보니 뜻을 파악할 수가 없다.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원래의 의도하는 바로 보인다. 아니

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한변협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우정권·송두환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각각 수사 대상인 현대증권과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경력 때문에 자격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야당은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3/26 국민】

'의구심과 함께'가 걸릴 데가 없다. 따라서 '의구심 때문에'라고 해야 한다.

물론 변협의 말처럼 두 사람의 인품과 자질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들의 사외이사 재직시 대북송금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다는 점도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특검후보 자격 시비가 두 사람의 자질이나 직접적 관련성 여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북 송금 특검을 둘러싼 국론은 아직도 '철저 수사'와 '국익 고려'로 첨예하게 대립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누가 수사를 맡아도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특검은 한 점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26 국민】

'특검후보 자격 시비가 두 사람의 자질이나 직접적 관련성 여부가 아니라는'은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검후보 자격 시비가 두 사람의 자질이나 직접적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이라고 하면 더 낫다고 본다.

조폭 출신인 노모씨 등은 2000년 5월 건축업자를 협박,1000억원 대 쇼핑몰 개발사업권을 빼앗고 은행 간부들에게 뇌물을 써 거액을 대

출반은 다음 이 돈을 발판으로 금품 제공과 불법 로비로 사업을 추진 해왔다고 한다. (중략)

폭력배는 큰 돈이 없어도 물리적인 힘과 비합법적인 사업 수완으로 거액을 만질 수 있다는 욕심에 개발현장에 몰리고 있다. [3/27 국민]

‘거액을 만질 수 있다는 욕심’은 자연스럽지 않다. ‘큰 돈이 없어도 물리적인 힘과 비합법적인 사업 수완으로 거액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폭력배들이 개발현장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면 더 낫다고 본다.

앞으로 NEI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와 전교조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결코 아닌데도 이 같은 구성방식은 교육계 내부에서 '정책 불복종 운동'까지 야기하고 있다. [5/28 동아]

'아닌데도'에 걸릴 부분이 없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결코 아닌데도 이 같이 구성함으로써 교육계 내부에서 '정책 불복종 운동'까지 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 현안에서도 이번처럼 주무부처의 의견이 무시되고 몇몇 인사에 의한 독선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5/29 동아]

아주 틀린 문장은 아니나 '몇몇 인사에 의해 독선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또는 '몇몇 인사에 의해 독선적으로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까'가 더 낫다고 본다.

'대통령이 타협하지 말고 법대로 밀어붙이라고 했는데도 교육부총리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지시를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합의

했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영(令)이 안 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참모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일이다. (중략)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지 않고, 대통령의 말이 수시로 변하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노 대통령은 지시를 거부한 참모를 단호하게 조치해 리더십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시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5/30 동아]

‘확보하든지’를 ‘확보하거나’로 고치거나 ‘확보하든지’를 유지하려면 ‘반성해야 한다’ 대신에 ‘반성하든지 해야 한다’로 끝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북 비밀송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듯하나 이 문제는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야 한다. 양당의 논의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건의 규명과 처리를 속히 하는 것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맞기 때문이다. [2/18 한국]

‘양당의 논의에는’이 호응할 성분이 없다. 따라서 ‘양당의 논의에는’이 아니라 ‘양당은’이 되어야 한다.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양당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같은 쪽덕거림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원칙 하에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수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19 한국]

‘위축시켜’가 걸릴 데가 마땅하지 않다. ‘위축시켜’와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이 아니라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는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됨은’이라고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는 것도 중요 변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특검법 통과 때 재적 3분의 2선인 182명을 겨우 2명 넘긴 18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여권의 의원들에 대한 회유 협박 공세로 특검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1/22 조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가 아니라 ‘우려하고 있다’로 족하다. ‘것이다’를 남용한 사례다.

경찰은 부안읍을 제외한 11개면에 23개 중대 2500여명을 배치한 것을 비롯해 75개 중대 8000명을 부안군에 투입했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100개 중대 이상을 배치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22 조선]

‘배치한다는 방안’보다는 ‘배치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해임 건의 수용 거부를 헌법 유린 운운하며 총공세를 편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9/8 한겨레]

‘편다는 것은’은 ‘퍼는 것은’으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정확한 정책목표와 의지, 그리고 정교한 방법론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 과제들이다. [2/25 한국]

‘제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 과제들이다’가 아니라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이다.

버려진 어린이들의 입양사업을 하는 사회운동가가 살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준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회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협박이나 **한대서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5/8 동아]

‘사회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협박이나 한대서야’가 아니라 ‘사회가 보상은 못해줄망정 협박이나 해서야’라야 한다. ‘한대서야’는 ‘한다고 해서야’가 줄어든 형태인데 그렇게 말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한 초등학교의 축구부 20여명이 한꺼번에 화마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아무리 어리석고 무신경하기로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희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3/28 국민]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몽땅 이렇게 희생시킬 수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있다는 것인지’는 ‘있다고 하는 것인지’인데 인용이 들어서야 할 자리가 아니다.

감천항은 그동안 외국의 총기류가 밀수입되는 루트라는 의혹은 자주 받아왔다. [8/19 대한매일]

한 문장에서 주제를 표시하는 ‘-은/는’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감천항은 그동안 외국의 총기류가 밀수입되는 루트라는 의혹을 자주 받아왔다’가 자연스럽다.

2. 접 속

접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질적인 것끼리 접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명사는 명사끼리, 동사는 동사끼리 접속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일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접속의 실패도 크게 보아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의 실패에 속한다. 다만 접속의 오류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따로 고찰을 해 보기로 한다.

국회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데 따른 자민련과 한나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과**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재의결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11/24 조선]

‘반발과’에 걸릴 말이 분명하지 않다. ‘이탈표가 발생,’에서 ‘발생’은 비록 ‘-하여’가 생략되었지만 동사로 쓰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반발과’처럼 ‘명사+ 과’로 쓸 것이 아니라 ‘동사+ 고’ 꼴로 쓰여야 옳다. 따라서 ‘국회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데 따라 자민련과 한나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재의결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이라고 해야 접속이 자

연스럽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암적 존재다. 이민열풍을 불러온 것도, 조기유학 붐도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때문이 아닌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과거처럼 용두사미식 대책으로 호도하거나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시키는 방안이 되서는 안될 일이다.** [10/15 경향]

마지막 문장은 접속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종류의 성분이 접속되어 있어서 어색함을 안겨 준다. 앞을 고치든지 뒤를 고치든지 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과거처럼 용두사미식 대책으로 호도하거나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시키는 방안을 내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도로 해야 짜임새를 갖추게 된다.

문제는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재신임 정국을 물고온** 책임을 이실장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여권내 기류다. [10/20 경향]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책임’과 ‘재신임 정국을 물고온 책임’이 접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책임’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다.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데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고 (정국이) 재신임 정국으로 빠져든 데 대한 책임을’ 정도로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짜임새가 있다.

문화재청에서도 2일 이같은 문화일보 보도가 나가자 관계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사실확인등에 나섰다. 우선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와** 상태및 훼손 여부 등을 파악키로 하고 하남시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존토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1/3 문화]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현지조사와'가 걸릴 데가 마땅치 않다. 문면만을 놓고 보면 마치 '현지조사를 파악키로 하고'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파악하다'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관계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여 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파악키로 하고'라야 한다.

차기정부 개혁정책의 한줄기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기존 헌법해석을 바꿔서라도 임기중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선공약 관철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임에 틀림없다.

(중략) 헌법이 시대정신의 반영인 한, 그 해석 또한 탄력적이어야 한다. 헌법도 정치·사회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사법부의 위헌법령심사권 등 사법적 기관의 헌법보장절차를 겸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직이 헌법해석에 탄력성을 부여할 사법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욱이 대통령직의 '해석개헌 주문'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나 헌법의 권력분립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1/29 문화]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며 동사는 '우려한다'이다. '우리는 대통령직이 헌법해석에 탄력성을 부여할 사법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직이 헌법해석에 탄력성을 부여할 사법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더욱이 대통령직의 '해석개헌 주문'은 헌법을 준수

할 의무나 헌법의 권력분립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총기강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치안의 효율을 높이고,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힌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 【8/8 대한매일】

‘총기강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보다는 ‘총기강도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이 더 적절하다. 그 뒤에 총기강도 사건을 막을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불법무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치안의 효율을 높이고’는 ‘불법무기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예방치안의 효율을 높이며’ 정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단속을 높이고’는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힌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밖에 없다’ 대신에 ‘범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붙잡힌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길밖에 없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더구나 청와대가 이 사건이 보도되자 자체조사를 벌인 뒤 양 실장을 구두경고만 했더니 그럴 일인가. 앞으로 교훈을 삼기 위해서도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검·경의 수사이건, 아니면 청와대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몰카에 의한 공직 모독과 인격 살인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8/2 대한매일】

‘검·경의 수사이건, 아니면 청와대 재조사를 통해서라도’는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검·경의 수사가 아니면 청와대 재조사를 통해서라도’ 또는 ‘검·경의 수사든 청와대 재조사를 통해서든’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정부 수뇌부의 이런 수수방관 때문에 **전경들의 부상이 작년보다 2배나 늘었고**, 중상자는 8배나 증가한 공권력의 중태(重態)상황에 물리게 된 것이다. [11/24 조선]

‘늘었고’가 무엇과 접속되는지 분명치 않다. 아마도 ‘전경들의 부상이 2배나 늘어난’ 것과 ‘중상자가 8배나 증가한’ 것이 모두 ‘공권력의 중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늘었고’보다는 ‘늘고’라고 하는 것이 낫다. 즉 ‘전경들의 부상이 작년보다 2배나 늘고 중상자는 8배나 증가한 공권력의 중태상황에 물리게 된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정 대표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는 대선자금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수사가 움죄어오자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임을** 들어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줬다. [8/6 대한매일]

명사구인 ‘정치적 위상’에 접속된 성분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임’인데 이는 문장이다. 명사구와 문장이 접속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정권 창출 과정에서의 절대적 공로를 들어’라고 하는 것이 낫다.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거나 ‘아니면 말고’ 식 질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0/2 경향]

‘채택하고’와 ‘몰아세우거나’에 접속되어야 할 성분은 동사이다. 따라서 “아니면 말고’ 식 질문하기’로 바꾸어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이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8/15 대한매일]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과 ‘대북 적대정책 포기’가 접속이 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라고 해야 한다.

박 전 실장은 그러나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혹의 시선들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박 전 실장은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르고**, 4000억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조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 조선]

‘박 전 실장은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러’ 또는 ‘들렀고’, ‘들렀으며’, ‘들른 뒤’ 정도로 해야 한다.

그런만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상당 부분 정부 잘못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김대중 정부 때 경기를 부양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노무현 정부도 이를 해결할 걸맞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9/8 한겨레]

접속에 문제가 있다. ‘과열시키고’는 ‘과열시켰고’로 하는 것이 나았다.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 전이었으므로 ‘과열시킨 일’이 확실히 앞선 일이었음을 보이는 게 좋다.

농산품의 수출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세계 각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외교적 역량을 다 해야 할 것이며 [9/14 한겨레]

접속이 동질적인 성분끼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산품의 수출과 수입국의 이해가'는 '농산품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라고 해야 한다.

조 장관은 또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가 이전될 경우 국민 안보의식의 문제와 한·미연합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2 조선]

‘문제’는 명사인데 ‘문제와’ 다음에는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처럼 동사구가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될 경우 국민 안보의식에 문제가 생기고 한미연합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든지 ‘이전될 경우 국민 안보의식과 한미연합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야 접속이 자연스러워진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와 이에 따른 파병안의 국회처리 전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11/24 조선]

‘국내 여론 악화와’에 걸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국회 처리 전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다.

진지하고 장기적인 '교도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손쉽고 단기적 해결

‘손쉽고’는 형용사이고 ‘단기적’은 명사여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손쉽고 단기적인’이라야 할 것이다. 문장 첫머리에서는 ‘진지하고 장기적인’이라고 해서 제대로 되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원유값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거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에 대한 기대는 부차적이다. [1/23 문화]

둘째 문장에서 접속이 불완전하다. 앞 부분이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로 서술어구라면 뒤도 같은 종류의 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는 믿음이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할 것이라는 기대는 부차적이다’라고 해야 반듯한 구조를 보인다.

국립박물관이 관료주의적이고 안이한 근무 자세로 유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번 일은 국립박물관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당국은 도난방지 시설은 물론이고 수장고의 유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는지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5/17 동아]

마지막 문장은 문법적인 측면에서 성분들 사이의 호응이 분명하지 않다. ‘당국은 도난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수장고의 유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한 점

검에 나서야 한다'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도난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를 '도난방지 시설은 물론이고'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아니면서 '부패세대'의 오명을 덤터기 써야 할 야릇한 팔자에 분노하고 억울한 것이다. [11/14 중앙]

'분노하다'는 동사이고 '억울하다'는 형용사이다. 이 역시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동사끼리, 형용사끼리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3. 성분 누락과 생략

문장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성분이 빠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문장의 문법성을 허물기 때문이다. 필수 성분 누락은 앞 문장에 제시되어 있다든지 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때에 한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필수 성분은 주어이다. 주어가 없는 문장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실제 문장의 예에서 주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악화와 이에 따른 파병안의 국회처리 전망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새롭게 나오고 있다. [11/24 조선]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의 주어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되어도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정도라면 훨씬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니면 '이라크 치안 상황의 악화가 추가파병 결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검찰은 또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모 정치인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 여러 곳에서 이를 돈세탁한 혐의도 잡고 수사 중이다.

기업체가 정치권에 전달했던 이 자금은 수백만원씩 나눠져 세탁돼 일부 유용된 정황이 잡혔으며, **한나라당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1 조선】

'한나라당 인사도 있는 것으로'에서 '한나라당 인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업체가 정치권에 전달했던 이 자금은 수백만원씩 나눠져 세탁돼 일부 유용된 정황이 잡혔으며, 이 자금을 받은 사람 중에는 한나라당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야 뜻이 분명해질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조속한 주권양을 위해 이라크 시아파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략)

NYT는 “**미국 정부는 현재 시아파 정부가 주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과 다른 걸프 국가들은 이라크에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내 시아파들이 동요하고, 이들 주변국은 이라크 내 수니파에 정부 전복을 사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1/21 조선】

'미국 정부는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주변국에' 또는 '세계를 상대

로' 정도가 될 텐데 이런 정보는 쉽게 독자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밝혀 주는 것이 좋다.

김 의원은 “부안에서는 지금 핵폐기장에 반대하며 제2의 동학난 조짐이 보이는데,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7만 주민에 800 경찰을 (동원해) 에워싸 쫓 불시위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독재시절에도 상상하기 어렵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11/24 조선]

‘부안에서는 지금 핵폐기장에 반대하며 제2의 동학난 조짐이 보이는데’에서 ‘반대하다’의 주어가 없다. 또 ‘반대하다’는 행동주를 요구하는 데 반해 ‘제2의 동학난 조짐이 보이는데’에서 ‘조짐이 보인다’는 행동주가 필요치 않아서 접속이 자연스럽지 않다. ‘부안에서는 지금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워낙 강해 제2의 동학난 조짐이 보이는데’ 정도가 좋을 것이다.

엿그제 농민시위를 직접 목격한 국제 금융전문가가 “이러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찬 것만 봐도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런 시위 때문에 자기 일자리 대신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라는 그의 경고가 얼마나 아픈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 [11/22 조선]

‘자기 일자리 대신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이 무슨 뜻인지 의미가 잘 해석되지 않는다.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이 된다. 그러나 사설이 의도하는 것은 다르다. 이는 이 사설이 나오기 전날 신문 기사가 보여준다. ‘달라라 소장은 노동자들에 대해

“강력한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일자리는 지킬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일자리는 지킬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를 줄여서 표현하다 보니 ‘자기 일자리 대신 자녀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가 된 것이다. 문장을 짧게 압축해서 쓰는 것도 의미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5억달러의 대북송금 자체에 대한 조사는 지난 특검에서 일단락됐고, 또 그 자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조사해야 하는데 특검 능력 밖의 소관이다. [7/22 중앙]

‘그 자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은 특검 능력 밖의 소관이다’라고 해야 완전해진다. 생략이 지나친 기사를 틀렸다고 해야 할지 용인 가능하다고 봐야 할지 경계에 놓인 듯이 보인다.

경제성장은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은 독재를 추방하는데 성공했지만, 오랜 독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30년 독재의 부작용이 십여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억눌렸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각 집단과 계층 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2 한국]

매우 빠른 호흡으로 글을 전개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은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면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독재를 추방하게 되었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포로 전용일(72)씨가 국방부의 명단 확인 소홀로 북송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은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 전사자나 포로를 그렇게 대우하는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 행세를 하겠는가. [11/23 한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뜻은 파악할 수 있어 보인다. ‘탈출한 국군포로가 북송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부끄럽다’라는 문장이 말이 돼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아니므로 부끄러움을 느낄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래 세 예문은 신문 칼럼의 글이 매우 호흡이 빠르고 생략 가능해 보이는 말은 가차 없이 생략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이끈다.

대다수 미국인은 아시아에서 편하고 익숙한 나라로 일본을 든다. 그 이유의 하나가 비슷한 문화적 정서다. 사무라이와 유사한 결투의 문화다. 권총 결투는 서부극의 장면만이 아니다. 미국 건국세대인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결투하다 숨졌다. 결투의 문화는 승복의 풍토를 낳아 민주주의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12/3 중앙]

지난 경험들은 우리에게 국회의원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는 환상을 깨라고 일러준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쥐떼 일 수밖에 없다. **머잖아 총선이다**. [10/29 중앙]

평화는 전쟁의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의 우위에다 적대세력의 전쟁의지까지 박멸해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체득한 이치다. **盧대통령이 진실로 링컨을 존경한다**

면 전쟁과 평화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알 것이다.

미국이 전투병을 요청했다. 이라크전 종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부시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졌다. 일방주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동맹의 한쪽에서 도움을 부탁하면 나서야 한다. 국제관계는 인간관계와 같다. 쌍방 통행이다. 그래야 한·미동맹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반도의 평화도 단단해진다. [9/24 중앙]

그러나 생략이 지나쳐서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할지 있다고 봐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에 전면 수사케 하자는 대통령의 말도 "너희가 우리보다 더 받았으니 더 부도덕하다"고 몰아 세울 계략은 아닌가. [11/3 중앙]

‘검찰이 전면 수사하게 검찰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말도’가 원래 의도하는 뜻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당당히 야당의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에게 따르라고 요구하라. 그런 연후 그 신물나는 부패정치의 검은 사슬을 끊는 방안을 세우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라. 이르면 이룰수록 좋다. 그 과정과 해법엔 극심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것을 설득하고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다. [10/24 중앙]

‘설득하고 극복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일 수는 없다. ‘그것을 설득하고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의 할 일이다’ 또는 ‘그것을 설득하고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의 바른 태도이다’ 정

도가 좋다.

또 언론 관련 언급이 너무 잦다. 국민들의 눈엔 마치 언론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처럼 보인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8/4 대한매일]

‘언론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은 옳지 않다. ‘언론 정책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고 해야 한다.

투쟁가들 중 일부는 지난 20여년간 정치세력의 영입을 받고 정계와 관계로 투신했다. [11/14 중앙]

‘영입을 받고’가 아니라 ‘영입 제의를 받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때 함석한 술집 주인이 조세포탈과 윤락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수사무마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7/31 중앙]

해마다 되풀이돼온 재산세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책상물림의 행정 탓이다. [7/28 중앙]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 강행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9/4 중앙]

명사를 서너 개씩 연결하는 것도 신문 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를 줄인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돼온 재산세 형평성 논란이’는 ‘해마다 되풀이돼온 재산세의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가 준 것이다.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 강행을 보면서'는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를 강행한 것을 보면서'를 줄인 것이다.

떡값은 가급적 선의로 이해해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원 업무를 통제하고 정보예산안·결산심사를 맡은 정보위에 대한 영향력 유인 수단일 것이다. [1/10 문화]

이 악순환을 시민일반의 에이즈 편견이 더 악화시키고 있다. [1/11 문화]

그런데 명사의 나열이 지나치면 매우 생경해진다. '정보위에 대한 영향력 유인 수단일 것이다'는 '정보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라고 풀어 쓰는 것이 더 알기 쉽다. '시민일반의 에이즈 편견'은 '시민 일반의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르다.

각종 시위대가 제멋대로 저지르는 공권력 조롱과 무법천지 행태가 끊이지 않는데도 공허한 말 대책만 나오고 있다. [11/22 조선]

'공허한 말 대책만 나오고 있다'에서 '공허한 말 대책'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다. '공허한 말'의 대책인지 공허한 '말 대책'인지부터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공허한 말만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가 더 낫다고 본다. 이것도 말을 간결하게 하려다 보니 생긴 게 아닌가 한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 진압은 민생치안이나 방법보다 경찰의 우선 업무가 됐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서는 연인원 67만여명이 각종 시위에 동원됐다. [11/22 조선 안석배]

‘연인원 67 만여명의 경찰이 각종 시위에 동원됐다’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 ‘각종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라고 해야 한다. 경찰이 일반적으로 시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시위에 동원됐다’가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로 해석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왕이면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늦긴 했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왕의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9/14 한겨레]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암적 존재다. [10/15 경향]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이다.

중소도시 학생의 고교 자율 선택은 학부모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가계에 쪼들리며 자녀를 대도시로 '유학'보내고 있는가. 과외비에다 하숙비등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폐해를 막는 것만으로도 시도해 볼 만하다. [1/28 문화]

'그 폐해를 막는 것만으로도'는 생략이 지나치다. 최소한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대표단은 회담 내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을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의 합의사항을 정리한 발표문에는 그런 발언의 흔적조차 없다. [5/1 동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을 강력히 제기했다’는 생략이 지나쳤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을 강력히 문제삼았다’라고 하든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위반을 강력히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감안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방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중 제한된 단체교섭에 대해 주목한다. **단체 교섭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인사, 예산등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1/25 문화]

‘단체 교섭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의 주어가 없다. 아마도 ‘문제는’ 정도가 생략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좀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생략이어서 해석을 어렵게 한다. ‘문제는’과 같은 주어를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즉 ‘문제는 단체 교섭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밑의 ‘변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의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문장 역시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단체 교섭권은’ 또는 ‘단체 교섭권의 허용은’ 정도를 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굳이 주어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설은 기명의 글이 아니다.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다. 그래서 사설 문장에서는 ‘나는’이라든지 ‘필자는’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어를 항상 생략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사설에서 필자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을 쓰기도 하고 ‘본란’을 쓰기도 한다.

국회 해임건의의 대상이 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초 물러날 듯하다가 갑자기 "국민과 함께 정면으로 맞서겠다"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우리는** 한나라당의 김 장관 해임안 처리가 정도를 지나친 것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그것이 김 장관이 억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 【9/5 조선】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책임과 의무는 없고 대통령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한만 가진 명함특보 임명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폐해는 권력형비리 조장과 비선정치 발호 및 국정시스템 혼선 가능성이다. 뻔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데도 특보 임명을 고집하는 것은 청와대의 자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9/25 동아】

그런데 ‘우리는’ 또한 ‘본란은’과 같은 표현도 없이 글쓴이의 행위임을 보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러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소장파 의원들이 '노인당'을 탈피하자며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5·6공 세력의 용퇴와 서울 강남, 영남 지역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가운데는 지구당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 자세를 보이는 의원도 있어 주목된다.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이 정당에 참여해 새 인물을 정치권에 수혈하며,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로 시대변화에 맞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 이 시대의 과제임은 **누차 강조해 온 터다**. [9/6 한겨레]

‘누차 강조해 온 터다’의 주어가 없어서 누가 강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본란이 누차 강조해 온 터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호홉맞고 코드맞는 사람들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중략)

새 정부의 '파격'인사에 대해서는 시도할 만한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눈에 띄는 게 사실이다. 인사에서 '코드'라는 것이 유난히 강조되는가 하면, 임명했다 취소했다 하거나 너무 오래 좌고우면하는 경우도 있다. [3/27 국민]

'인식을 갖고 있다'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히 주어를 요구하는 동사인데도 주어가 없으니 궁금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정도를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우리는 새 정부의 '파격' 인사가 시도할 만한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개혁은 "더불어" 할 때 성공한다는 사실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속도가 느릴지 모르지만 공직사회를 개혁의 동반자로 만들 때 국가개조도, 국민소득 2만달러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직사회를 평가르는 공식-비공식 개혁주체 발상은 잘못이다. [6/16 세계]

이 예문에도 '알고 있다'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때에는 '알고 있다'의 주어가 반드시 사실의 필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사람들은'이나 '누구나' 정도가 숨어 있는 주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은 "더불어" 할 때 성공한다는 사실은 경험

이 말해 준다’ 또는 ‘개혁은 “더불어” 할 때 성공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말해 준다’ 정도가 더 좋을 것이다.

다음 기사는 유난히 주어를 생략한 문장이 많은 예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점 후 지난달 23일까지 총매출액은 212억원으로 하루 2억원 넘게 팔려 **성공이란 자평이다.** (중략)

반면 제주도에 들어오는 수입은 현재 등록세 1억 6700만원뿐이지만, 앞으로 외국 선박의 유치, 제주 홍보, 선박 금융과 보험 등의 유입 등 그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략)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은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 현재 13개 업체가 5조5501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여 **목표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략)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 등을 운영 중인 SCI는 25억달러를 투자, 5000실 규모의 초대형 호텔, 해양수족관 등 **종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략)

현재 제주의 평균 개인소득은 7122달러(2001년 기준)로, 이를 2011년까지 총 29조원을 투자해 **2만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략)

특히 주변에 도쿄, 베이징 등 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 5개와 오사카, 타이베이 등 인구 500만명 이상 13개 도시가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는 자평이다.** (중략)

물론 갈 길은 멀다. 그러나 그 방향만은 분명히 잡고 있다는 게 **제주 도민들의 확신이다.** [4/7 조선]

‘-란 자평이다’, ‘-다는 전망이다’, ‘-ㄴ 전망이다’, ‘-ㄴ 계획이다’, ‘-ㄴ다는 계획이다’, ‘-다는 자평이다’, ‘-다는 것이 -의 확신이다’와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어가 대체로 생략되어 있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남들의 자평이나 확신에 대한 소개, 남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에 대한 소개들로 이루어져 기사에 객관성이 별로 뚜렷이 느껴지지 않는다.

노사가 합심해도 거친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판에 우리의 주력 산업이 주저앉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7/29 중앙]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는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나는 의문스럽게 느낀다’라고 바로 해석되므로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러나 모든 ‘명사+이다’ 구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국 성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늘겠지만 올해보다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수출과 함께 경제를 지탱해 주던 건설경기도 시들해질 전망이다. [12/17 중앙]

오늘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보다 30% 높고,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엔 현재보다 최고 1.5배나 높아질 전망이다. [9/15 중앙]

추징금 환수를 놓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 경매가 북새통을 이룰 만큼 관심을 끌었다는 소식이다. [10/3 경향]

‘전망이다’, ‘소식이다’는 ‘전망이 있다’, ‘소식이 있다’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실제 지지율(힘)에 따라 돈이 쏠리는 경향이였다. [11/10 중앙]

‘지난 대선에서도 실제 지지율(힘)에 따라 돈이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건 민감한 치부인 대선자금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한 긍정적 반응이라는 풀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권력 핵심부에서 형성돼 온 정 대표의 궁극적인 거취에 대한 내심이 영접결에 표출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7/16 동아]

이 예는 실제로 ‘명사+ 있다’로 실현된 예이다.

명색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다. 최대표는 당초 국회 대표연설에 의원직 총사퇴와 자신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려 했다가 "대통령과 여야 모두 국민 상대로 협박정치를 하자는 거냐"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혼선은 애초 반노(反盧)정서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들의 안정회구 심리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이다. [10/15 경향]

굳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언어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다른 나라간의 교류에는 한 두마디의 말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3/26 경향]

이 경우는 ‘생각이다’의 생각이 필자의 생각이므로 그 점을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예 ‘생각이다’를 빼서 그냥 ‘한나라당의 혼선은 애초 반노 정서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들의 안정 회구 심리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라고 하든지 ‘한나라당의 혼선은 애초 반노 정서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들의 안정 회구 심리를 미

처 간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완전하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역시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든지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만나 "별 어려움이 없다. 노사분규, 사회 불안 요소 등 무엇을 내놓아도 당선됐을 때보다 낫다"고 정국과 시국을 낙관했다는 보도다. 대통령이 국정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안팎의 상황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6/19 세계]

이 예문은 어느 사설의 첫 문장이다. '보도다'의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생략이 지나쳤다고 여겨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만나 "별 어려움이 없다. 노사분규, 사회 불안 요소 등 무엇을 내놓아도 당선됐을 때보다 낫다"고 정국과 시국을 낙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도가 낫지 않나 생각한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만나 "별 어려움이 없다. 노사분규, 사회 불안 요소 등 무엇을 내놓아도 당선됐을 때보다 낫다"고 정국과 시국을 낙관했다고 보도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우방은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 일관성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정보 처리방식을 불신하고 있다는 보도다. [6/14 세계]

마찬가지로 '불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라고 하든지 '불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완전해진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을 들어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수치는 4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내기업의 비싼 인건비, 노동의 경직성,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견디지 못해 중국 등으로 다시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7/3 중앙]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되었다’라고 하든지 ‘다시 빠져나갔다고 분석된다’가 더 좋을 것이다.

게다가 포스코가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보상과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시장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21 중앙]

‘시장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라고 하든지 ‘시장을 화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4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30% 안팎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4/22 동아]

‘예상이다’의 주어가 없다. ‘3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30% 안팎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바르다.

그간 밀항권유설 수사는 청와대 정부비서관의 부인해명을 듣는 것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몸통 격인 최 전 총경의 신병을 하루 속히 인도받아야 할 까닭이다. [2/27 한국]

‘인도받아야 할 까닭이다’보다는 ‘인도받아야 하는 까닭이다’가 더 어울린다.

신문의 글에서는 ‘명사+ 중이다’ 구성이 또한 널리 쓰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으로 ‘시청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은 ‘시청료 분리 징수를 추진 중인’으로 쓰인다. 과연 이런 문장을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냐가 문제인데 신문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확립된 어법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 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7/17 중앙]

벌써 한나라당은 시청료 분리징수를 추진 중이다. [10/10 중앙]

4. 조 사

조사 역시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바른 조사 선택이야말로 문장 성분들 사이에 호응을 제대로 맺어 준다. 신문의 글에서는 조사 사용에 있어서도 독특한 점이 엿보인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을 짧게 줄여서 쓰려다 보니 조사도 될 수 있으면 글자를 덜 쓰는 쪽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당장 ‘에’와 ‘에서’가 그렇다. ‘에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를 쓰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특히 정치자금 거부자 명단공개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개특위의 **수용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11/24 조선]

‘수용 과정에’가 아니라 ‘수용 과정에서’라야 하는데 ‘수용과정에’라고 하였다.

19일 시위 과정에서 늑골을 다쳤다는 김모씨는 “한 집 건너 알고 지내던 부안 사람들이 혹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돈을 받지 않았나’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도 우리가 잃은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11/24 조선]

‘잃은 것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니라 ‘잃은 것 중의 하나일 것’이라야 한다. 비슷한 예가 또 있다.

1971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 후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내가 학생이라면 받고 싶은 그런 방식의 교육을 하자"였다. [4/22 동아]

조사 ‘의’가 발음은 주로 [에]로 되다 보니 표기까지 ‘에’로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비상시에 대비해 철저히 보험을 들어 두지만, 우리나라에선 보험료를 아끼려고 필요한 가입금액의 일부만 들어놓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요즘에는 이웃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책 없이 주거공간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22 조선]

‘대부분의 아파트 생활을 하는 요즘에는’에서 ‘대부분의’는 ‘대부분’ 또는 ‘대부분이’로 바뀌어야 한다.

조정이혼 결정이 난 뒤에라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고씨는 2년 이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20 조선]

‘2년 이내’에는 조사가 없는데 ‘2년 이내에’라고 해야 한다.

현대차 역시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 금융 지원을 이유로 **우
리사주조합에서**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 [11/21 조선]

‘우리사주조합에서’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라야 한다.

이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김 의장이
정 의원의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정 의원은 심각한 난관에 빠질 수
도 있다. [11/21 조선]

‘김 의장이 정 의원의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라고 했는데 무슨 뜻
인지 명확하지 않다. ‘김 의장이 정 의원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
라고 하면 뜻이 분명해진다.

출제위원장을 지낸 대학교수가 수능 비법 참고서를 만들어 팔고
있는 상황에선 수능의 공정성이란 **입발린**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11/18 조선]

이번 경우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 등 국내의 호된 비판이 있긴 했
지만 전후 광복세대의 한국 지도자로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 발
린** 소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은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
하다. [6/12 대한매일]

‘입발린 구호’가 아니라 ‘입에 발린 구호’이다.

이 때문에 인근 전주, 김제, 고창의 식당들이 **경찰들의** 도시락 배
달로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11/26 조선]

‘경찰들의 도시락 배달로’는 경찰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경찰들에게 하는 도시락 배달’로 해석될 가능성보다 더 크다. 따라서 ‘경찰관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국제대회 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의 국제적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6자회담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국제적 신뢰**가 떨어진다면 회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행한 일이다.
【8/19 대한매일】

‘북한의 국제적 신뢰가’는 뜻이 분명치 않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야 분명해진다.

미국이 3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현안 논의는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체제보장**을 구두로라도 약속하는 것이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8/1 대한매일】

‘북한의 체제 보장을’보다는 ‘북한 체제의 보장을’이라고 하거나 ‘북한 체제 보장을’처럼 아예 조사를 다 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이라고 하면 마치 북한이 그 어떤 체제를 보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체제를 미국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의 장관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행동이다. 【7/18 중앙】

‘비난하다’는 ‘-을(를) 비난하다’ 꼴로 쓰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신에 ‘사법부의 판단을’이 되어야 한다. 거꾸로 ‘판단에’를 살리려면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의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행동이다’ 정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해 북한에 불가침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북한과 미국간의 실질적 대화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파월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1/10 문화】

파월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파월 장관이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청와대의 사장 인선 개입이 어떤 라인에서 빚어진 일인지, 이사회 의 사장 선출은 적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5/3 동아】

‘정치권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이 아니라 ‘KBS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야 한다.

존속론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흉악범으로부터 사회 보호'를 내세우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9/15 한겨레】

‘흉악범으로부터 사회 보호’가 아니라 ‘흉악범으로부터의 사회 보호’라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일이 걱정이다. 당장 재신임 투표와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와 있는데 선관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격렬한 정치투쟁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른 인적쇄신이 그것이다. 【10/17 경향】

‘앞으로’는 부사이다. 따라서 ‘일이 걱정이다’ 전체를 꾸미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의도는 ‘앞으로 닥쳐올 일이 걱정이다’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일’만을 꾸미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이’라 하는 것이 맞다.

‘현금보상’ 발언을 했다 반복해 불안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윤 장관은 최근 불안 군민들의 과격, 폭력 시위가 연일 무정부 상태로 넘나드는 와중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력 회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1/22 조선】

‘무정부 상태로 넘나들다’는 ‘무정부 상태를 넘나들다’가 더 적절하다.

이미 LG카드는 이번 현금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11/24 조선】

‘고객들로부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보다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가 더 나아 보인다.

준사법기관으로 자임하는 검찰이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 【5/15 동아】

‘준사법기관으로’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을’이 되어야 한다.

역사의 감수성은 세련됐고 자기 희생은 돋보였다. [9/24 중앙]

‘역사에 대한 감수성’이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5. 문 체

말은 사용되는 상황에 맞게 형식이 달라진다.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격식에 맞는 말의 형식이 있고,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 맞는 말의 형식이 있다.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어의 문말 어미이다. 문말 어미에는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해체', '해요체', '하라체' 따위가 있다. 이 중에서 '하라체'는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 아닐 때 낮춤과 높임이 중화된 느낌을 주는 종결형의 말체로 주로 광고문, 연설문 따위의 문장에 쓰는 걸로 되어 있다. 신문의 사설이야말로 듣는 상대방이 특정 개인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런데도 '하라체'를 쓰지 않고 '해라체'를 쓰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 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뿐더러 이들 기업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업을 뺑개치고 자기만 살겠다며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11/18 조선]

이 문장에서와 같은 '무슨'은 보통 입말에서 쓰는 표현이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라든지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와 같은 표현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이런 '무슨'은 문어, 특히 신문 사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무슨 파렴치범도 아닐뿐

더러’는 ‘이 사람들은 파렴치범도 아닐 뿐 아니라’와 같이 쓰는 것이
신문 사설에 적합하다.

이번 제안도 먼저 서울대가 어떤 대학을 지향할 것인지 기본틀을
세우고, 학내 동의를 얻고,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2005년 시행이라는 시한에 매이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
정을 거쳐라. [7/22 중앙]

맨 마지막의 ‘거쳐라’는 적절치 않다. ‘거치라’도 아니고 ‘거쳐라’는
사설 문장으로서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다. ‘거쳐야 한다’ 정도가 좋다
고 본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6자회담의 공감대를 지켜라. 그 길
만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지를 넓히는 최상책이다. [10/4 경향]

사설에서 ‘공감대를 지켜라’처럼 해라체 문장을 쓰는 것은 어울리
지 않는다. ‘6자회담의 공감대를 지키라’라고 하든지 ‘6자회담의 공
감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낫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 사설의 제목이 명령문일 경우 해라체로 쓰이
는지 하라체로 쓰이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흥미있다.

명령문의 동사가 ‘하다’이거나 ‘명사+하다’일 경우 ‘해라’로 쓰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모두 ‘하라’로 쓰고 있다. 즉 하라체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하다’나 ‘명사+하다’가 아닐 경우는 양상이 아주 달라
진다. 다음은 ‘하다’나 ‘명사+하다’가 아닌 동사들의 사례이다.

경제난국 극복에 힘 **모으라** [국민일보 3/07]
新黨도 대선자금 장부 **내놓으라** [조선일보 10/29]
실체적 진실 밝혀 죄를 **씻으라** [한겨레 12/16]
청와대는 썬앤문 전모 **털어놓으라** [조선일보 12/19]

盧 중재안 ‘북핵 독트린’ **살어라** [대한매일 1/04]
경제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조선일보 4/3]
출산여건 제대로 **만들어라** [문화일보 4/5]
‘철도 파업’ 대화로 **풀어라** [대한매일 4/16]
NEIS 대화로 **풀어라** [문화일보 5/20]
노동정책에 대한 실망 새겨**들어라** [조선일보 5/31]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대한매일 8/1]
추석 민심 겸허히 **읽어라** [경향신문 9/9]
재벌 비자금 정치권 고리 **끊어라** [대한매일 10/6]
대치정국, 대화로 **풀어라** [한국일보 12/1]
재벌 비자금 정치권 고리 **끊어라** [대한매일 10/6]
KBS사장 공정히 다시 **뽑아라** [문화일보 4/3]
국책사업, 정부가 중심을 **잡아라** [세계일보 7/19]
"아파트 광풍" 확실하게 **잡아라** [세계일보 9/8]
신문독자 '매수'경쟁 **뿌리뽑아라** [한겨레 10/8]
경제팀이 중심 **잡아라** [국민일보 10/13]
‘수능평가원장’ 사표 **받아라** [문화일보 11/15]
수능 개선대책 **내놓아라** [한국일보 11/17]
국군포로 북송 **막아라** [문화일보 11/21]

‘-으라’ 계열은 하라체이고 ‘-어라’나 ‘-아라’ 계열은 해라체이다. 해라체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다’나 ‘명사-하다’의 경우 해라체가 전혀 쓰이지 않고 하라체만 쓰이는 것과는 극명하게 비

교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유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기라 [한겨레 12/5]

국회, 이제 민생부터 챙겨라 [경향신문 12/5]

측근비리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겨라 [동아일보 12/4]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대한매일 11/19]

‘챙기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4건의 사설 중에서 ‘챙기라’는 한 건에 지나지 않고 세 건이 ‘챙겨라’에서 해라체이다. ‘밝히다’의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극심하다.

盧캠프 불법자금도 밝히라 [한국일보 12/13]

한나라당 總選자금까지 다 밝히라 [조선일보 11/4]

휴대폰 盜聽, 검찰이 사실 여부 밝히라 [조선일보 10/8]

'20만달러 수수' 폭로과정 명백히 밝히라 [한겨레 4/2]

미군 재배치 양국 협의 내용 밝혀라 [세계일보 11/28]

盧캠프 '차명계좌' 진상 밝혀라 [동아일보 11/6]

盧후보 '이중장부' 의혹도 밝혀라 [동아일보 10/29]

"책임 지겠다"면 다 밝히라 [한국일보 10/27]

한나라당은 참회하고 진실 밝혀라 [세계일보 10/24]

검찰은 당선축하금 비리 전모 밝혀라 [조선일보 10/15]

이라크 파병, 분명히 밝혀라 [경향신문 10/2]

'安風' 돈의 성격과 실체를 밝혀라 [조선일보 9/27]

"몰카 배후" 철저하게 밝혀라 [세계일보 8/18]

양길승 청탁 의혹도 밝혀라 [대한매일 8/8]

대선자금 여당부터 밝혀라 [대한매일 7/16]

대선자금 의혹 모두 밝혀라 [동아일보 7/16]
 대선자금 규모 스스로 밝혀라 [대한매일 7/14]
 탈당 의원들은 行先地를 밝혀라 [조선일보 7/8]
 '김영완 의혹' 제대로 밝혀라 [경향신문 6/28]
 군장성 비리 전모 밝혀라 [경향신문 6/13]
 용인땅 의혹 확실히 밝혀라 [경향신문 5/31]
 전두환씨 일가 축재과정 밝혀라 [대한매일 5/21]
 법조 브로커 진상 밝혀라 [대한매일 4/25]
 나라종금 연루 정치인 밝혀라 [대한매일 4/24]
 판공비 금액부터 밝혀라 [문화일보 4/9]
 鄭희장, 南北 정권과의 거래를 밝혀라 [조선일보 2/17]
 '4천억 北 지원' 전모 밝혀라 [대한매일 1/31]

4 개만 '밝히려'이고 나머지는 다 '밝히려'이다. '밝히려'이다. 하라
 체가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어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근본대책 세우라 [동아일보 8/26]

인터넷 대란,근본대책 세워라 [대한매일 1/27]
 북핵회담 참여대책 세워라 [한국일보 4/18]
 물류대란 근본대책 세워라 [대한매일 5/8]
 日 대중문화 개방, 대비책 세워라 [세계일보 6/10]
 청계천 유물발굴 대책 세워라 [대한매일 6/30]
 '환율전쟁' 대비책 세워라 [대한매일 8/11]
 청년실업 근본대책 세워라 [경향신문 9/23]
 최악의 실업난 근복대책 세워라 [경향신문 10/7]
 수능혼란과 공교육 실종 대책 세워라 [세계일보 11/10]

‘세우다’의 경우 해라체인 ‘세워라’가 9건, 하라체인 ‘세우라’가 한 건이다.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 [조선일보 12/01]

재벌, 美 갑부에게서 배워라 [대한매일 01/16]

익산고를 보고 배워라 [동아일보 12/06]

‘배우다’의 경우도 해라체인 ‘배워라’가 두 건, ‘배우라’가 한 건이다. 8월 26일 사설에서 ‘세우다’를 하라체로 쓴 동아일보가 12월 6일 사설에서는 ‘배우다’를 해라체로 쓴 것이 흥미롭다.

‘차별 시정법’ 제정 서둘러라 [문화일보 1/23]

‘농업지원 특별법’ 서둘러라 [대한매일 2/7]

경제 대외홍보 서둘러라 [대한매일 2/13]

특검 수정법안 서둘러라 [대한매일 3/15]

특검법 재협상 서둘러라 [국민일보 3/24]

追更, 불가피하다면 서둘러라 [국민일보 6/4]

고용허가제 처리 서둘러라 [경향신문 6/18]

주5일제 입법 서둘러라 [대한매일 6/18]

빈곤층 급증 대책 서둘러라 [대한매일 10/14]

여야는 정치복원 서둘러라 [국민일보 11/28]

‘서두르다/서둘다’는 10건 중에서 하라체인 ‘서두르라’, ‘서둘라’는 한 건도 없고 모두 ‘서두르다’의 해라체인 ‘서둘러라’로 쓰였다.

노무현정부, 초심을 지켜라 [경향신문 2/25]

비전투병 파병 원칙 지켜라 [대한매일 11/12]

검찰, "경제파장 최소화" 약속 지켜라 [세계일보 11/18]

파병 동의안 부결시켜라 [한겨레 4/1]

주5일제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세계일보 8/20]

‘지키다’와 ‘-시키다’도 5건 모두 해라체인 ‘지켜라’, ‘-시켜라’로 쓰였다.

안전시스템 완전히 바꿔라 [문화일보 2/20]

집값 잡으려면 發想을 바꿔라 [조선일보 5/24]

학생정보 관리체제 바꿔라 [대한매일 11/29]

감세 논의 속도를 높여라 [문화일보 6/4]

정치개혁 속도 높여라 [대한매일 12/04]

‘바꾸다’와 ‘높이다’ 역시 각각 3건, 2건 모두 해라체인 ‘바꿔라’, ‘높여라’로 쓰였다.

노 정권은 당장 공권력을 풀고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말로 따져라. 그리고 파업노동자들과 토론을 벌이라. [6/29 한겨레]

재미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따져라’는 해라체이고 바로 뒤이어 나오는 ‘벌이라’는 하라체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아무런 어감의 차이를 못 느낄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어감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안씨나 변호인단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김영대 대통령특보내정자를 비롯한 노 대통령 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시민변호인단의 면면부터가 석연찮다. 또한 안씨가 변호인단이 그토록 강하게 법 집행에 저항하는 데는 드러내놓고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든다. 얼마 전 "동업자이자 동지인 안씨가 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5/24 동아]

무엇보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메시지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발표문에는 '다자틀 속의 북한 안전보장'이라는 해법이 들어있으나 이 해법은 6자회담 당시부터 누누이 강조돼온,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하루 전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런 완고한 입장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0/21 경향]

'노 대통령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와 같은 표현은 사설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위 두 글은 신문 사설에서의 글이고 아래 글은 기명 칼럼이다. 기명 칼럼은 이름을 밝히고 쓰는 것이므로 그런 제약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헛갈리는 것은 최의원은 횡령은 안했다하고, 한나라당은 당에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후원회조직인 부국팀도 한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검찰이 '최의원은 죄질이 다르다'고 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상당액을 횡령한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혼자 100억원을 다 썼겠는가. 그렇다면 최의원을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사설이나 칼럼은 매우 점잖은 말을 쓰도록 기대되는 언어 사용 상황이다. 그리고 문어를 써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그러한 기대와는 다른 것들이다.

하긴 정말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 할 정치인이 아주 없기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신의 선배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겨냥했을 현직 의원의 이런 표현은 제3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7/8 국민]

이들을 뭐라 부를까. 건달? 조폭 영화에서 건달은 조폭보다 한 수 위인 부류이니 그렇게 불러주기 싫다. 그럼 **양아치**? 점잖지 못한 말이기도 하지만, 양아치보다 더 해악스러운 존재이니 이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 [9/22 중앙]

까놓고 말해서 '동정정치'는 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8/27 동아]

해당 부처를 **조지든가**, 새로운 대응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든가 무엇이든 상황을 바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모의 할 일이다. [9/29 중앙]

검찰이 하나 **깎** 때마다 정치권은 초죽음이 되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죽을 고비가 남았나. [10/27 중앙]

‘양아치’, ‘까놓고 말해서’, ‘조지든가’는 우선 점잖지 못한 말이고 신문의 사설, 칼럼에서 쓰기 쑥스러운 말이다. 삼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까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밝히다’, ‘수사하다’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민란 수준으로 민심이 흉흉한 위도 현장에 대통령이 못 간다면 총리라도 가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가 왜 잘못됐는지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허나 우리의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번 위도 현장에 간 적이 없다.【9/25 중앙】

이런저런 우려와 과장을 충분히 감안한대도 여론의 초점이 고졸 생산직이라는 직종이 이렇게 연봉이 많아서야라며 '고졸 생산직'에 맞춰져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8/13 한겨레】

세계 5대 자동차회사를 목표로 하는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조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배 아프지 않다. 비록 나의 연봉이 그에 못미친대도 말이다. 【8/13 한겨레】

‘허나’는 ‘하나’의 구어이다. ‘감안한대도’, ‘못 미친대도’는 ‘감안한다고 해도’, ‘못 미친다고 해도’를 줄인 말인데 입말에서 주로 쓰는 말이니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IV. 어휘

IV. 어 회

문장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 일그러진다. 의도했던 뜻이 전달되지 못한다.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단어 선택을 잘못할 수 있다. 그 결과 의미 전달에 장애가 발생한다. 어떤 단어든 단어는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어의 문제는 문법의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이다.

1. 단어 선택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단어의 핵심적 의미 못지 않게 주변적 의미도 중요하다. 미묘한 의미차이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사(餓死)야말로 최악의 고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1/22 조선]

‘아사(餓死)’는 고문에 의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아사’가 곧 고문은 아니다. 따라서 ‘아사야말로 최악의 고문’이라는 표현은 온당하지 않다. ‘굶겨 죽이기야 말로 최악의 고문’이라고 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데

대해 추상 같은 교훈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국민 동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6/7 세계]

‘추상 같은 교훈’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추상 같은 영’이라든지 ‘추상 같은 별’, ‘추상 같은 징벌’ 같은 말이 어울린다. 위 문장에서는 ‘교훈’을 살리기보다는 ‘추상 같은’을 살리는 것이 의도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하리라 보인다. 그렇다면 ‘추상 같은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든지 아예 ‘추상 같은 영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도권 의원 대다수는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 걸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입장이었다. [11/25 조선]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의식해’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충청권 의원들을 의식해’라고 하든지 ‘충청권 의원들의 눈치를 보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로 진작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돌발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잠시도 긴장을 낮춰서는 안 된다. [3/19 국민]

‘긴장’은 ‘늦추는’ 것이지 ‘낮출’ 수는 없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한다.

민주당 김영환 전 정책위의장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 특

례 확대가 절실하며, 공무원 신규 임용의 상당 부분을 과학기술 전문가 특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장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이공계 출신이 일정 비율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11/21 조선]

‘전환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는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는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야 한다. ‘동의하다’는 ‘동의(同意)하다’와 ‘동의(動議)하다’가 있는데 위 예문에서는 어느 ‘동의하다’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자는 ‘~에 동의하다’로 쓰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고, 후자는 ‘회의 중에 토의할 안건을 제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역시 위 예문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동의하다’ 대신에 ‘주장하다’나 ‘제안하다’ 따위를 쓰는 것이 맞다.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이공계 출신이 일정 비율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보다는 ‘이공계 출신이 일정 비율 진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가 더 낫다고 생각된다.

유일 강대국 미국의 오만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반미에는 원인과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결과가 우리의 이익과 합치해야 하는데 과연 최근 1년의 상황이 그랬던가는 의문이다. [5/13 동아]

‘반미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어색하다. ‘반미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는 ‘반미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가 더 맞다.

물론,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가격도 하락해 이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수출에 주는 부정적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환율 하락 추세를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9/23 한겨레]

‘부정적’과 ‘효과’는 서로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다. 국어사전에도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로 뜻풀이 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 대신에 ‘부정적 영향에는’이라 해야 할 것이다.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정도의 강풍 탓에 미처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곳곳의 전주와 송전탑, 변압기 등이 것처럼 허약하게 무너지고 파손된 사태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위난 때 정전이나 통신두절 사태가 불러오는 엄청난 파급효과에 비취볼 때 앞으로 단단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9/14 한겨레]

‘정전이나 통신두절 사태’가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효과’는 의도한 일, 긍정적인 일에 대해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정전이나 통신두절 사태가 불러오는 엄청난 파급 영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모처럼 국민통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었던 23주년 기념식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로 얼룩짐으로써 역사에 오점 하나를 추가하게 됐다. [5/19 동아]

위 문장이 성립하려면 ‘23주년 기념식이 대학생들의 시위로 얼룩지다’가 문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념식이 대학생들의 시위로 얼룩지다’는 어색한 구문이다. ‘얼룩지다’가 ‘기념식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원래 의도했던 뜻을 나타내자면 ‘기념식이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로 제대로 치러지지 못함으로써’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노 대통령의 변신이 ‘표변’으로 평가되고, 그래서 그가 성공한 대통

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을 또 한번 바꾸고 싶은 유혹과 과거 지지세력의 무분별한 요구로부터 초월해야 한다. [5/27 동아]

‘-(으)로부터 초월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을/를 초월하다’라야 한다. 따라서 ‘말을 또 한번 바꾸고 싶은 유혹과 과거 지지세력의 무분별한 요구를 초월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로부터’를 살리려면 ‘초월하다’ 대신에 ‘초탈하다’나 ‘자유로워지다’를 써야 할 것이다.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 같다.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 송교수는 1970년대 초 유신체제 이후 노동당 입당과 북한 방문 등 친북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다. 또한 송씨는 한국의 실정법을 존중하겠다는 자술서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한다.

송씨가 이제서야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 [10/1 경향]

‘자신에 대한 의혹을 밝힌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 정도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다른 부처 업무와의 조화까지를 고려해 국정 전반을 생각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집단의 이해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5/30 동아]

‘이해(利害)’란 이익과 손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해서는’이라고 해야 맞다. 만일 ‘이해’를 살리고자 한다면 ‘주장해서는’ 대신에 ‘고려해서는’ 또는 ‘중요시해서는’ 따위가 와야 한다.

이런 터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안씨의 해명은 보도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 1994년형 쏘나타를 SM5로 바꾼 건 사실이나 친구들이 선물로 준 것이고, 자신 명의로 등록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차적(車籍)을 친구 회사에 올렸다는 게 보도된 해명 내용이다.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비판이 더 거세졌음은 물론이다. '개혁 세력 흠집내기' 등 일부 옹호도 있으나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3/24 국민]

‘보도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는 문면 그대로 놓고 볼 때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보도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안씨의 해명은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정도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뜻이 아닌가 한다. 또는 ‘이런 터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안씨의 해명은 진실인지 의심케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청률 지상주의의 결과일 수 있다. 어쨌든 '튀어보자'는 식의 말초적 제작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초적 제작관행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 KBS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권에 편향된 사회자를 등장시키는 등 오해를 많이 받아왔다. 이번 일도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7/3 중앙]

‘오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현 정권에 편향된 사회자를 등장시키는’ 일이 오해를 받아오게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KBS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오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오해’는 단정적 표현이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하든지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해’라는 표현은 KBS의 입장을 두둔하는 입장일 때에 어울리는 말이다.

가장 빈곤한 계층의 후생을 증대하지 않고는 어떤 사회 개선도 기대하지 말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 경고에 수긍하면서도, 나는 부자의 경제학이 빈자의 경제학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 경제에서 목도한다. [7/24 중앙]

‘후생을 증대하지 않고는’보다는 ‘후생을 향상시키지 않고는’이 더 낫다. ‘증대하다’는 ‘소득을 증대하다’와 같은 경우에 어울린다.

조 장관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용산기지 잔류 부지 규모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 “연말까지 이 문제를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박진(朴振)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11/22 조선]

‘문제를 타결하도록’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도록’이나 ‘문제를 매듭짓도록’이 더 나아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도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몰카’테이프에 대해 청와대는 반대파에 의한 지역이권 다툼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반대파가 양 실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전에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도 의심스럽다. [8/7 대한매일]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었느냐’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의문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의심스럽다’ 대신에 ‘의문스럽다’나 ‘의문이다’가 더 적당해 보인다.

만약 처리가 늦어져 파병 시기를 놓칠 경우 파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파병 자체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28 국민]

'파병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파병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나 '파병 자체의 의미가 반감될 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꾼다는 것을 **명분 삼는 눈치**인데 이것과 사무실 방문 취재 금지는 보완관계일 수가 없다. [3/29 국민]

'명분 삼는 눈치'인데'는 생략이 지나치다. '기자실을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꾼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가 본데(싶은데)' 정도가 더 낫다.

부정·부패는 여전히 고질병으로 남아 있고 도처에 만연된 적당주의는 이번 대구 지하철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문화**를 잉태하고 말았다. [3/1 국민]

‘대구 지하철참사’가 ‘죽음의 문화’일 수는 없다.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문화를 잉태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낳고 말았다’ 정도가 더 낫다고 본다.

설의원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도 하거니와 폭로 때의 당당한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기 바란다. **김 전 비서관**은 설의원의 법정 진술을 일단 수궁하는 **분위기**이긴 하나 설의원에게 일임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많은 의심을 자초할 것이다. [3/29 국민]

'김 전 비서관은 ...분위기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분위기'라는 말이 잘못 선택된 듯이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은 설의원의 법정 진술을 일단 수궁하는 태도이긴 하나' 또는 '김 전 비서관은 설의원의 법정 진술을 일단 수궁하는 듯이 보이나' 정도가 더 나은 표현이다.

2.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와 동사는 서술어를 이룬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다시 하위분류된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간에 ‘-는’ 어미가 결합될 수 없다. ‘-는’ 어미는 동사에만 결합된다. 최근 들어 형용사와 동사의 이같은 구별이 흐려지는 듯이 보인다.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형용사가 동사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당리당락에만 충실하는 곳이 바로 정치권임이 새삼 입증된 셈이다. [2/27 한국]

‘충실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충실하는 곳’이 아니라 ‘충실한 곳’이라야 옳다.

우리나라 학생들만 유독 매를 들어야 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한 기질을 갖고 있더라도 한다는 말인가. [9/15]

‘갖고 있더라도 한다는’이 아니라 ‘갖고 있더라도 하다는’이라야 한다.

청와대 측은 '네덜란드식 노사정 협력관계'가 성공적이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7/2 중앙]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정작 주무장관인 문광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팔짱끼고 있는 모양이 되고 말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수능시험이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다. [7/25 동아]

‘성공적+이다’는 형용사 구문이므로 ‘성공적이지 않느냐고’라고 해야 한다. ‘말았지 않는가’는 ‘말았지 않은가’여야 한다. ‘아니지 않느냐고’는 ‘아니지 않느냐’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당사자들의 진술과 해명, 태도에서 추가 증언으로 비밀 송금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생긴다. [2/18 한국]

‘어렵지 않는냐는’이 아니라 ‘어렵지 않느냐는’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일부 특정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말이냐’보다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 맹신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데 익숙해 왔다. [5/27 동아 이규민]

선거가 다시 가까워온 모양이다. [9/8 중앙]

북측이 이번 일, 그 중에서도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또 얼마나 이용할지 벌써 머리가 아파 온다. [8/19 국민]

우리는 너무나 이데올로기적인 판단에 익숙해 있다. [9/22 중앙]

한국은 군사대치 속에 사는 나라다. 평화와 전쟁의 함수관계에 익숙해야 한다. 평화를 어떻게 획득, 유지하는지를 아는 게 리더십의 요체다. [9/24 중앙]

‘-아/어 오다’ 앞에는 동사만 올 수 있다. 형용사는 올 수 없다. ‘익숙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익숙해 오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익숙해져

왔다’라고 하거나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해야 한다. ‘가까워온’도 ‘가까워져 온’이라고 하거나 ‘가까워진’이라고 해야 한다. ‘익숙해 있다’는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고 ‘익숙해야 한다’는 ‘익숙해져야 한다’라야 한다.

이후 김영삼·김대중정권의 대통령아들들 비리와 넘쳐나는 게이트들도 엄단은커녕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로 뒤끝마저 **흐려왔다**. [1/3 문화]

‘흐리다’는 형용사이기만 하고 동사로 쓰이지는 않는다. 형용사는 그 어간 다음에 ‘아/어 오다’로 쓰일 수가 없다. 동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흐려져 왔다’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김위원장 발언이 검찰청법 명문에 어긋나며, 나아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릴** 또 한줄기 역풍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1/8 문화]

‘본질을 흐릴’에서 ‘흐리다’는 형용사인데 타동사처럼 썼으니 잘못이다. ‘본질을 흐리게 할’이라 해야 한다.

3. ‘-시키다’

명사에 ‘시키다’가 결합되어 동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감동-감동시키다, 이해-이해시키다, 만족-만족시키다, 좌절-좌절시키다, 분담-분담시키다, 출석-출석시키다 따위와 같은 것들이 그런 예에 속한다. 이런 말은 ‘감동하다’, ‘이해하다’, ‘만족하다’, ‘좌절하다’, ‘분담하다’, ‘출석하다’와 ‘감동시키다’, ‘이해시키다’, ‘만족시키다’,

‘좌절시키다’, ‘분담시키다’, ‘출석시키다’의 뜻이 전혀 다르다. ‘-시키다’가 결합된 말은 남이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시키다’가 결합된 말이 ‘-하다’가 결합된 말과 아무런 뜻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강화하다’나 ‘강화시키다’나 뜻의 차이가 없다. ‘관철하다’와 ‘관철시키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시키다’ 꼴을 쓰는 이유는 ‘-하다’ 꼴보다 뜻이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시키다’ 꼴이 뜻이 명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하다’ 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다’ 꼴을 쓰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신문의 글에서 특히 ‘-시키다’ 꼴이 즐겨 쓰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키다’가 생겨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라크 공격의 당위성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주입시킨 세력이 '네오콘'으로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이고, 그 선봉에 체니 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후세인 체포는 체니식 이라크 사냥의 완결을 의미한다.
[12/19 중앙]

청와대가 생각하는 대언론 코드가 사실상 언론인과의 공식적인 접촉 횟수를 줄이거나 비공식적 접촉을 아예 차단시키고 있다.
[8/19 중앙]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자금 공개와 관련, 사용했던 '고해성사'적인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래 놓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다. [7/23 중앙]

1991년 걸프전(戰)의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당초 수비 개념의 ‘사막의 방패(Desert Shield)’였던 것을 이라크 공격을 개시하면서 바꿨는데 사막에서의 전쟁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20 조선】

‘부각시키는’은 ‘부각하는’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한다.

지금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1/24 조선】

‘회복시키기’나 ‘회복하기’나 뜻이 같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직원 2명을 **출국금지**시켰다. 【11/24 조선】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일부 포장 제품에 국한된 문제로 전체 의약품 생산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폐경기 치료제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22 조선】

또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치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국정원 직원의 정당·정부부처·언론사 출입도 **금지**시킬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3/28 국민】

‘금지시키다’나 ‘금지하다’나 뜻이 같으므로 ‘금지하다’를 써도 충분하다. 다만 금지하는 조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했다면 ‘금지시키다’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금지시키다’와 ‘금지하다’는 뜻이 약간 다르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김봉훈 학원총연합회 사무국장은 “학교 내 과외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경우 6만 7000여 학원은 설 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당하게 되므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긴과외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만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를 학원에만 전가시키는 오류라며, 쫓기대회에서 이에 대한 규탄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11/22 조선]

일부 언론과 노 대통령과의 갈등이 문제를 확대시키는 면이 없지 않은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6/4 문화]

‘확대시키다’의 경우 ‘확대하다’와는 아무 의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대할’이라야 해야 한다. ‘전가시키는’도 ‘전가하는’이 맞다.

또 이맘 때면 계열사별로 혁신 활동 발표회를 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시켰다. [11/21 조선]

‘무기 연기시켰다’가 아니라 ‘무기 연기했다’가 더 적절하다. 연기 조치를 딴 사람을 시켜서 했다면 ‘연기시키다’를 쓸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금시장의 흐름을 더욱 왜곡시켜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10/14 경향]

‘왜곡시켜’는 ‘왜곡해’와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고 있다.

구차하게 정치개혁과 연계시키거나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모적인 논란만 가열시킬 뿐이다. [10/14 경향]

‘연계시키거나’도 ‘연계하거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제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적이탈 요구까지 거론되었다. [3/18 국민]

민주당이 진정으로 당리당략보다 국익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특검법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검을 하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8 국민]

‘관철시키기’도 ‘관철하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쓰이고 있다.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절실히 필요하다. [5/19 동아]

‘활성화시키다’는 그 조치를 남들을 통해서 할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활성화하다’와는 의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내년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개선시키는** 일이다. [5/13 동아]

‘개선시키는’도 어떤 별도의 조치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라면 ‘개선하는’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에 이어 이번 한총련 집단행동에 이르기까지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했던,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국정운영이 국가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5/20 동아]

정치논리가 연금개혁을 훼손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19 중앙]

그 점에서盧대통령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7/21 중앙]

‘훼손시키다’는 남들을 시켜서 ‘훼손하는’ 것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훼손하다’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제로 ‘훼손하다’가 쓰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요구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극력 반대했다.
[7/28 중앙]

이 역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7/22 국민]

성조기와 인공기를 훼손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훼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8/31 한국]

눈에 보이는 물건인 성조기, 인공기는 ‘훼손시키다’가 아니라 ‘훼손하다’가 쓰이는 것이 보통이고 추상 명사에 대해서는 ‘훼손시키다’, ‘훼손하다’가 다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화물차 차주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도 원칙을 깬 양보다. [5/20 동아]

또한 얼마 전 단행된 특별 사면 복권에 한총련 관련자들을 다수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정부 청사에서 공공연히 수배자 신분인 한총련 의장을 만난 것은 법치의 상식에 어긋난다. [5/15 동아]

‘포함시키다’는 어떤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포함하다’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리장성은 중국인에게 더 이상의 영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계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의 과장된 '만리장성의 신화'는 민족적 우월감,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고취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9/22 경향]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지역구도를 깬다는 신당의 명분은 결국 총선용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6 동아]

‘해소시키다’와 ‘해소하다’의 차이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해소하지 못하면’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환경단체들 역시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고집할 때는 지났다. 환경운동의 목표가 환경과 삶의 조화에 있다면 이를 현실에 접목시켜 난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더 절실한 것이다. [7/23 중앙]

초·중등 교육권을 지방자치에 흡수 통합시켜야 한다. [11/11 대한매일]

은행 내부에 공범이 없으면 위조 인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있었지만 결국 내부자가 고객의 비밀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25 문화]

자기 스스로 ‘유출한’ 것이라면 ‘유출시킨’을 쓸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유출시킨’은 ‘유출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자니 정부는 돈이 더 들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결국 성장력을 잠식시켜 나라경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7/28 중앙]

‘잠식시켜’는 ‘잠식해’와 뜻의 차이가 없어 보이므로 ‘잠식해’로 바꾸어야 하겠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속이 '국면 전환용'이나 '재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24 한국]

미국측의 불신을 완전히 불식시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각을 세웠던 그들의 시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실 아닌가. [8/13 동아]

지금 모두가 검찰만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11/1 대한매일]

‘불식시키기’와 ‘불식하기’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불식하기’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번 청문회가 낙후된 우리의 인사청문회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

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2/21 한국]

‘업그레이드시키는’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이다.

물러나는 김대중 정부나 새로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인수 인계 시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켜** 경기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 [1/7 문화]

정당의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라고 해서 폐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중앙당도 마찬가지다. 수십억원의 현찰을 쌓아두는 중앙당이 왜 필요한가. 이번 기회에 **최소화시켜야** 한다. [11/16 세계]

‘최소화시켜’는 ‘최소화해’, ‘전환시키고’는 ‘전환하고’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행정감독으로 탈법적인 고용행태를 **근절시키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문제와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1/10 문화]

지난해에는 러시아가 영어단어를 무절제하게 끼워넣는 이른바 러스글리시(Russglish)를 **근절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잘못 썼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순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9/19 경향]

‘근절시키고’는 ‘근절하고’라고 해야 한다. ‘근절하기 위해’라고 쓰고 있는 사례도 있어 흥미를 끈다.

인수위가 24일 백지화 방침을 결정하면서 정부 당국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시민단체에 먼저 통보한 것도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

다. [1/27 문화]

'배제시킨 채'가 아니라 '배제한 채'이다.

신당 또한 사실상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면 지역주의를 오히려 세분화하고 **강화시키는**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5/6 동아]

하지만 중국의 강경 입장은 대만 독립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1/26 조선]

신당 또한 사실상의 인위적 정계개편이라면 지역주의를 오히려 세분화하고 **강화시키는**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5/6 동아 전진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북한 핵을 함께 처리할 우방으로 일본을 먼저 꼽는다. 북핵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은 미-일 동맹을 **강화시켰다**. [12/3 중앙]

‘강화시키는’ 대신에 ‘강화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확대되면 사회혼란만 심화시킬 것이다. [10/7 대한매일]

교육의 목표는 입시 과열을 **완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7/25 동아]

북군이 리치먼드를 **합락한** 직후 아들과 함께 그곳에 갔던 링컨의 모습을 실제 크기로 재현했다. [9/3 중앙]

국회에서 논란을 빚기 전에 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도대체

어떤 정책조정 시스템을 작동했는가. [동아]

신문의 글에서 ‘-시키다’를 남용하지 않고 ‘-하다’를 쓰는 예들도 있다. 다음의 ‘완화하다’, ‘함락하다’, ‘작동하다’는 세간에서 ‘완화시키다’, ‘함락시키다’, ‘작동시키다’로 흔히 쓰는 것들이다.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때 반(反)세계화 운동의 급진적 시위대들이 폭력 사태를 발생시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 미국 경찰은 시위대가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진압한다. 미국에서 화염병 또는 기물 파손 시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11/22 조선]

우리를 더욱 절망시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국군 지휘계통의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12/5 중앙]

첫 예문에서의 ‘발생시키다’는 ‘발생하다’와는 뜻이 전혀 다르므로 ‘발생시키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폭력사태를 발생시키자’는 좀 생경한 표현이어서 ‘폭력사태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전달하는 것을’도 ‘표시를 전달하다’가 어색하므로 ‘의사표시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시키다’ 동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떤 ‘-시키다’는 용인 가능하고 어떤 ‘-시키다’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기 쉽다. 아쉬운 것은 국어사전마다 ‘-시키다’ 동사들의 처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혀 ‘-시키다’ 동사를 사전 표제어로 올리지 않은 사전도 있고, 올린 사전도

있다. 올린 사전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시키다’ 동사를 표제어로 올렸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하다’ 동사와의 의미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예컨대 ‘훼손시키다’를 올린 경우 ‘훼손하다’와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시키다’ 동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시키다’ 동사는 덮어 놓고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하다’를 쓰자니 너무 뜻이 약해서 ‘-하다’를 쓰지 않고 ‘-시키다’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손상시키다’와 ‘손상하다’ 중에서 ‘손상시키다’를 쓰려고 하는 동기는 ‘손상하다’가 너무 뜻이 약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시키다’ 유형의 동사가 앞으로 또 얼마나 늘어날지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하다’와 ‘-시키다’가 공존하면서 점차 ‘-시키다’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다’와 ‘-되다’가 공존하면서 ‘-되다’가 세력을 넓히고 있는 현상도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는 특이하다. 왜냐하면 ‘악화되다’, ‘격화되다’와 같은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하다’, ‘격화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예이기 때문이다.

해외환경은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이라크전쟁이 초기에 종결됐고 북한 핵문제도 **악화하지**는 않았다. [12/17 중앙]

그러나 이들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이 '올해보다 더 **악화하지** 않을 경우'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2/17 중앙]

정부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은 소득분배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 가는 방식의 불평등 보험, 세대 간 위험부담이 공정한 사회보험제도, 위험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약 등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11/26 중앙]

' 거미 구멍'에 숨어 있던 '악의 화신'을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크 내 반미 저항 세력의 테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12/19 중앙]

이중 피동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잊혀지다'와 같은 예
는 대표적이다.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싶은 욕구에서 형태소를
접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틀리다고 해야 할 사례까지 나타
난다. '비쳐지다' 같은 예가 거기 속한다.

속사정 뻔히 알면서 정의의 대변자인양 주권이양 문제로 미국을 또
다시 절고 넘어지는 프랑스가 미국의 눈에는 골치 아픈 갈리아로 비칠
수도 있다. [9/26 중앙]

여기에 단식투쟁을 벌이는 사람이 약자로 비쳐져야 공감을 불러 일
으킬 수 있다. [11/27 문화]

첫 예문에서는 '비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는 '비쳐져
야'로 쓰이고 있다.

이 나라 보수주의가 지금 이처럼 공격받고 있는 이유도 5, 6공 인
사들이 마치 보수의 본류처럼 비취진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9/8 중앙]

그는 자신이 친척들에게 불효자나 패륜아 정도로 비취질까 두려워
하고 있다. 상속 재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도 아니란다. [11/11] 중앙

아예 ‘비추다’의 어간에 ‘-어지’를 결합한 ‘비춰지다’가 쓰인 예도 있다. ‘비춰지다’는 옳지 않은 말이라 할 수 있다.

독재 정권에 의해 재갈이 물려진 채 사복 경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던 언론은 그때서야 정직하게(?) 법무장관의 증언을 '말한 대로' 보도했고 법무부는 제발 기사를 빼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12/15 중앙]

‘물린 채’나 ‘물려진 채’나 뜻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물려진 채’라고 쓰는 것은 뜻을 또렷하게 나타내야겠다는 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물려진’ 역시 ‘물린’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본다.

4. 외 국 어

국어 속에 쓰이는 외국어 단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 외국어 단어가 자주 쓰이다가 보면 외래어가 되는데 외래어는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한편 외래 요소의 비중을 크게 함으로써 고유 요소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언론은 새로운 외래어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창구다.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함으로써 눈길을 끌고자 하는 언론의 피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진다.

우리사회의 기본 문제중 하나가 사회적 **마이노리티**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다. [1/8 문화]

‘마이노리티’는 지나친 외국어 사용의 예다. ‘소수자’, ‘약자’ 등으

로 써도 무방할 것이다.

노무현당선자도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는 물론 그 가능성까지 경계함으로써 권력불신을 씻기위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바란다.
[1/8 문화]

‘시그널’도 외국어 남용의 사례다. ‘신호’라고 쓰면 된다.

노조가 집단이익에 매달려 때를 쓰는 행동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7/1 중앙]

‘컨센서스’는 ‘공감대’ 정도로 바꾸어 표현해도 문제없다.

이번 청문회가 낙후된 우리의 인사청문회 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2/21 한국]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고, 우리 세정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세무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 노력과 조세 체계를 명료화.과학화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7/8 중앙]

‘업그레이드시키는’ 대신에 ‘한 단계 높이는’, ‘끌어올리는’으로 써도 충분하다고 본다. ‘업그레이드되기’는 ‘한 단계 올라서기’로 바꾸면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중국인은 홍콩 최고급 주택가인 미드레벨(半山)의 아파트 10채를 2200만위안(33억원)에 매수했고, 한 중국인은 홍콩 북부 상수이(上水)지역에 664만위안(10억원)을 투자, 아파트 5채를 구매해 빅뉴스가 됐다. [9/27 조선]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최근 재계에는 이런저런 흥흥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연일 검찰발(發) 빅뉴스들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과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불법 정치자금 주고받기' 관행을 끝낼 수 있을까. [11/21 동아]

‘빅뉴스’라는 말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아닌가 한다. ‘빅뉴스가 됐다’는 ‘크게 화제를 모았다’로 ‘검찰발 빅뉴스들이’는 ‘검찰에서 나온 큰 뉴스들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또 일부에선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및 청와대 386 참모들과 수사진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7/28 중앙]

그러나 오늘 허구의 경계인 스토리에 눈물 흘리는 젊은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10/12 한국]

돈과 권력의 유착은 오랜 세월 서로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형성된 끈질긴 관계여서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결단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10/12 한국]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애견인들이 벌였던 줄다리기는 해피 엔딩으로 정리됐다. [11/16 한국]

이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된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이였다. [9/5 동아]

두 집단의 공통점은 일단 '쿨'하다는 거다. (중략) 이상한 건 서구에선 이미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혀진 동거가 우리나라에선 쿨하고

선진적인 새로운 삶의 양식처럼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7/24 동아】

여러 이유 중 인브리딩 인사, 이른바 코드 인사탓이 크다고 본다. 【10/24 중앙】

대중에게 노출이 심한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서 외모 '업그레이드'가 활발하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11/14 한겨레】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한나라당은 '변화를 싫어하는 정당' '흐르지 않는 웅덩이 같은 정당' '국민과 스킨십이 없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6/26 대한매일】

양측 도합 200만명에 이르는 군대가 중무장한 채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서로에 대한 전략이 없을 수 없다. 이를 전제로 말하자면 우리 내부의 이 격렬한 증오와 대립을 유도해 낸 것만으로도 전략 및 게임의 위너는 아무래도 저 쪽인 듯하다. 【8/5 국민】

요즘 시중의 화제는 단연 '차떼기'다. 출연인물과 시추에이션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12/14 세계】

남북한 분단체제는 송씨 같은 철학자의 눈물도 만들었지만, 6·25전쟁도 만들었다. 또 얼마나 많은 충돌과 유혈테러가 있었는가.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집권자가 센터멘털리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 【10/5 세계】

전에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

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표단속을 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의 데미지 때문에 망설여야 했다. [10/5 세계]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로는 당내에서 조대표의 독주를 경계해 다리를 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만약 그리되면 민주당의 리노베이션도 결국 헛공사가 되고 말 것이다. [12/5 문화]

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혹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대통령 교체로 인한 정국혼란을 겁내 찬성해 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이브한 생각이다. [10/17 문화]

386 의존이 일차 문제다. 정치적 변방에서 변화를 위해 함께 고뇌하고 함께 싸워온 동지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노무현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인지 모른다. [8/25 문화]

최소한 의회정치가 무엇인지, 중앙정치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사람들과 일해야 한다. 국민 다르고, 국회 다르고, 언론 다르다는 인식은 정치 메커니즘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다. [8/25 문화]

그는 못가진자 가난한자등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남북문제에서도 그때까지와는 다른 길을 열려 노력했다. [7/7 문화]

그런 선결조건이 이루어지면 노무현대통령의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세상을 바꿔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세력으로부터 언제 강력한 백러시를 당할지 알 수 없다. 이념의 펜들럼은 오가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빨리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다. [2/25 문화]

5. 기 타

‘담보하다’라는 말과 ‘대목’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신문에 대단히 빈번하게 쓰이게 되었는데 그 뜻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뜻과 꽤 차이가 난다. ‘담보하다’가 부쩍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북한에서의 ‘담보하다’의 용법이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5.1. ‘담보하(되)다’ , ‘대목’

‘담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세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담보 「1」 맡아서 보증함. 「2」 『법』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와 보증 채무, 연대 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다. 『담보로 잡히다/담보를 넣다/담보를 설정하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3」 『북』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함. 또는 그런 것. 『우리의 과학은…조국의 만년 대계를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선대》 §

또 ‘담보하다’ 역시 세 가지 뜻을 지닌 것으로 되어 있다.

담보하다 【…을】 「1」 맡아서 보증하다. ≒인당하다. 『채무를 담보하다/그 일의 성사를 제가 담보하겠으니 믿어 주십시오.』 「2」 『법』 담보로 제공하다. 『부동산을 담보하다.』 & 「3」 『북』 =>담보
03 [3] .

그런데 아래와 같은 예문의 ‘담보하다’는 「1」, 「2」의 뜻은 아닙니다. 「3」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증인, 참고인들의 국회 출석은 국감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다.
【10/2 경향】

그것이 이번 비자금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10/10 경향】

그러나 정파성보다는 전문성을 국가 인사정책의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권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1/28 문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 【5/13 동아】

하지만 청와대와 해당부처의 견해가 충돌하거나,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2/19 한국】

이러한 현실감각과 그것에 기초한 도덕성은 대선자금을 재벌기업의 돈을 각출하여 쓰면서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만큼의 도덕성을 담보한다. 【11/16 한겨레】

시청자들에게 살아있는 현대사 교과서가 되는 만큼 공영성도 담보할 수 있다. 【10/10 중앙】

이래도 될 것인가. 지금 1년은 향후 한국의 장래 10년을 담보할 중차대한 시기다. 【9/4 중앙】

노 대통령의 보험 아이디어를 뇌물의 법이 막고 있다. 대통령에게 그 위의 법을 우러르라 할 것인가, 법더러 그 아래 대통령을 굽어살피라고 할 것인가. 그도저도 아니라 실은 위·아래를 잘못짚은 것은 혹 아닐까. 이 혼란의 위험을 **담보할** 보험상품이라도 있어야 하는게 또 아닐까. [11/11 문화]

개정 의견 가운데는 정치자금의 단일 계좌이용,자금 지출의 카드·수표 사용 의무화,거비용제한액 위반 유죄판결시 당선무효 등 투명한 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은 문제를 바로 보고 풀어야 한다.민주당 대표의 혐의는 그것대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정치 자금문제는 과거의 고백보다 미래의 투명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7/24 대한매일]

만약 그가 곱든 밋든 민주당내의 반노파를 잘 다독거리 민주당 결속을 강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에서 그와 코드가 맞는 상당수 젊은 의원들을 동정 세력화했다면 가는 길도 순탄해지고 참여정부의 성공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5 세계]

위 예문들의 '담보하는'은 '보장하는' 정도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용법의 '담보하다'를 인정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가 몰카를 동원해서라도 '외압설'이 난무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수사는 수단의 합법성이 **담보됐을** 때만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8/21 대한매일]

이런 개혁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신당 창당의 명분이 국민을 설득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9/20 한겨레]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가 곤란한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는**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게 바로 특검제다. [11/11 국민]

노 정권은 다만 수구신문들과 긴장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으로 개혁성이 **담보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6/29 한겨레]

‘합법성이 담보됐을 때만’은 ‘합법성이 보장됐을 때만’ 또는 ‘합법성이 성립됐을 때만’이라야 하고 ‘개혁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개혁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이라야 한다. ‘담보되다’를 위 예문처럼 쓰는 것은 북한식 어법에 가깝다.

‘담보하다’, ‘담보되다’ 못지 않게 신문의 글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말이 ‘대목’이다. ‘예상되는 대목이다’,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대되는 대목이다’ 등과 같은 표현이 즐겨 쓰인다. 국어사전을 보면 ‘대목’은 그저 ‘일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대상’을 뜻하는 말로 ‘결정적인 대목’, ‘주목할 만한 대목’, ‘문제의 대목’으로 쓰이거나 ‘이야기나 글 따위의 특정한 부분’을 뜻하는 말로 ‘심청이 아버지를 만나는 대목은 감동적이었다’ 등과 같이 쓰이는 걸로 되어 있다.

신임 최병렬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10만명 이상의 당원이 참석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만큼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리더십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6/27 세계]

이 예문에서 쓰인 ‘대목’이 과연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0만명 이상의 당원이 뽑은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리더십이 기대된다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기대되는 까닭이다’나 ‘리더십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정도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모든 ‘대목이다’ 표현이 다 바뀌어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목’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金부위원장이 향후 처신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본인으로서야 억울한 대목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가 국내외 스포츠계에 공헌한 것도 적지 않다. [7/30 중앙]

주민들의 노력으로 서울시내 둔촌동의 습지가 되살아 났다고 한다.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이란 모임까지 결성해 7,500평 습지를 살려낸 주민들의 환경살리기가 매우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곳에는 황조롱이 등 희귀새 20여종이 서식하고 물박달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고 한다. 삭막한 도시풍경에서 둔촌동같은 더많은 습지가 생겨나길 기대한다. [9/23 경향]

5.2. 새 말, 새 용법

신문에서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서 쓰기도 한다. 그런 새말은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널리 퍼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널리 퍼지느냐 사라지느냐는 시간이 판가름해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말을 쓴 사례도 있다.

사상-이념의 절제가 한미관계를 복원한 것처럼 제(諸)사회세력에 대한 균형감 회복 역시 경제안정에 순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6/3 세계]

‘경제안정에 순기능한다’니 명사로 ‘순기능’은 있어도 동사로 ‘순기능하다’는 아직 없는 말이다. ‘경제안정에 순기능으로 작용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경우 우리 사회는 '20대 80'을 넘어 '10대 90' 상태에 돌입, 중산층 몰락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 분열이 가속할 우려가 있다. [2/18 한국]

‘가속하다’는 타동사로서의 용법은 사전에 올라 있으나 자동사 용법은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가속할’이 아니라 ‘가속될’로 써야 할 것이다.

대신 탈락자의 명예보호 등을 위해 누가 추천됐는지는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7/30 중앙]

‘개혁’ 정권의 ‘개혁’은 수구신문, 수구정치세력과 티격태격하면서 ‘개혁’을 증거하고, 수구신문은 현상적, 선정적으로 판지를 걸면서 장사를 도모하고 수구정치세력은 수구스럽게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거한다. [11/14 한겨레]

국민 네명 가운데 한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숨지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질곡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엄청난 투자가 이뤄져도 **임종환자**는 늘어만 간다. 인공호흡기의 개발로 죽음을 늦출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들은 다시 인간적인 고뇌에 시달린다. 최후가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함께 인공호흡기를 강력히 권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윤리문제에 직면한다. [11/11 중앙]

학생.선생 조폭에다 마누라 조폭까지, 사람들이 원조 조폭의 참뜻을 잊을까봐 걱정이라는 **엄숙주의**가 발동될 만큼 다양한 조폭이 만들어졌다. [9/22 중앙]

대선자금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국민들이 빨리 마무리하라는 것은 정치권이나 재계가 바라는 것처럼 빨리 **그려덮자는** 것이 아니라 구린 놈이 큰소리 치는 더러운 꼴 그만보자는 것이다. [11/25 대한매일]

이상과 현실 사이,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 사이의 긴장과 함께, 현 단계 대중의 의식과 **끊임없이 긴장해야** 한다. 노 정권은 다만 수구 신문들과 **긴장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으로 개혁성이 담보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6/29 한겨레]

‘~과 긴장하다’라는 용법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새로운 용법을 시도한 것이다. ‘**끊임없이 긴장하다**’도 독특하다.

5.3. 어미

회의에 배석했던 총리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군 통합문제를 결정할 때 각 시군 의회에서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원전센터 건립 문제도 군(郡) 의회에서 주민 투표 조례를 만들어 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1/24 조선]

언젠가 박정희정권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법학자 황산덕씨가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는 글을 써 수난을 겪은 적이 있다. [10/17 문화]

‘효과적이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아니라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가 옳다.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황산덕 씨가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는 글을’ 역시 ‘황산덕 씨가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글을’이라고 하든지 ‘황산덕 씨가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라는 글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인 강창희(한나라당.사진) 의원은 21일 밤(한국시각)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폭발음이 들렸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11/22 조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었는데’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라고 하든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또는 ‘옷을 갈아입으려는데’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V. 정리

빈 면

V. 정 리

1. 사설, 칼럼 문장의 특징

□ ‘나’ 와 ‘국민’ 을 혼동한다

“소신 갖고 일해줘 고맙다”며 등을 두드려줬던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에 국민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낀다. [11/25 조선]

신문의 논설문이 ‘국민’을 앞세우기를 좋아한다.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갖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을 언론계에서 ‘국민은 이렇다’는 식의 표현을 즐겨 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한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국민은 어떠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민은 힘이 빠진다’, ‘국민은 피곤하다’, ‘국민은 입을 다물 수가 없다’와 같은 문장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힘이 빠진다’, ‘피곤하다’ 같은 표현은 말하는 이의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인칭, 즉 ‘나는’ 외에는 어떤 말이 오더라도 어색한 느낌을 준다.

나의 느낌, 나의 의견을 말하면서 ‘국민은’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 주어를 드러내지 않는다

최근의 테러들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라크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펼친다면 파병도 두 나라 사이에 좋은 미래를 여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사설은 어차피 신문사의 의견이고 기명이 아니니까 ‘필자는’과 같은 표현조차 쓰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란은’, ‘우리는’과 같은 표현을 쓰는 데 인색하다.

문제는 ‘-는 지적이다’, ‘-는 분석이다’와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자주 쓰인다는 것이다. 누구의 지적이요, 누구의 분석인지 알 수 없다. 나의 지적인지, 남의 지적인지 알 수 없다. 나의 경우라면 ‘-라고 지적하고자 한다’와 같은 표현을 쓰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지적이라면 ‘-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는 생각이다’와 같은 문장이 널리 쓰인다. ‘생각이다’의 경우는 그야말로 ‘나’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 ‘나’를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정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게 만든다.

□ 지시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허구헌 날 시위 때만 되면 맨 앞줄에 나타나 얼굴 선전을 해대던 사람들은 나라가 나중에 깡통을 차게 되더라도 ‘내가 잘못했소’ 하고 나설 양심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논설이므로 의견 표명이 뚜렷한 것은 좋다. 누구를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 공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공격 대상이 누구지를 분명하게 가리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누구지 분명히 밝히

지도 않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 아니다. 이라크의 다수 국민은 쫓겨난 후세인을 증오했다. 겸손한 권력으로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베트남의 호치민(胡志明)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라크에 가면 베트남에서처럼 한국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논리적인 비약을 저지름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뜻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게 하는 경우가 있다.

□ 의미가 모호하다

먼저 SK 비자금 진상부터 규명한 연후 고해성사를 하든, 특검을 통해 대선자금 전모를 규명하든 정치개혁을 위한 단호한 의지로 국민들의 사면을 받는 것밖에는 묘책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도 의미 파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 스스로 의미를 명확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경우와, 필자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 문법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갔었다는 사실을 속이기까지 하고 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원유값 상승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석유 비축 물량이 충분하다거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에 대한 기대는 부차적이다.

문법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호응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특히, 접속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두드러진다.

□ 생략이 보편화되어 있다

검찰에 전면 수사케 하자는 대통령의 말도 "너희가 우리보다 더 받았으니 더 부도덕하다"고 몰아 세울 계략은 아닌가.

5 억달러의 대북송금 자체에 대한 조사는 지난 특검에서 일단락됐고, 또 그 자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을 조사해야 하는데 특검 능력 밖의 소관이다

검찰은 또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한 모 정치인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 여러 곳에서 이를 돈세탁한 혐의도 잡고 수사 중이다..

신문 문장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빠른 호흡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제한된 지면이다. 한정된 지면 속에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 '생략 가능한 것은 다 생략하라'가 신문 문장 작성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다른 하나는 속보성이다. 신문은 분초를 다투어 제작한다. 한가하게 오래 생각하고 오래 다듬을 틈이 없다. 읽는 사람 역시 오래 두고 곱씹어 보면서 읽지 않고 핵심만 읽고 말기에 군더더기다 싶은 말은 뺀다.

그래서 신문 문장을 분석할 때에는 앞뒤 문맥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뒤 문장을 떼어 버리고 나면 무슨 뜻으로 말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신문 문장은 대체로 매우 속도감 있다. 그것이 신문 문장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때도 있다. 생략이 지나쳐서 논리적 비약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짧게 압축해서 쓰려는 욕구는 신문 문장만이 지니는 특성도 보여준다. ‘검찰은 김 씨를 수사 중이다’처럼 ‘주어+서술어’의 구성에서 서술어가 ‘명사+중이다’의 꼴인 경우가 신문 기사에서는 흔히 쓰인다. 일반 문장에서는 으레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 또는 ‘검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중이다’와 같이 쓸 문장을 그렇게 쓴다.

주어 없는 문장이 신문에서는 흔히 나타난다. ‘-할 계획이다’, ‘-할 전망이다’와 같은 문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생략된 주어는 여러 가지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주체가 앞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와 같이 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인지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할 전망이다’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이런 주어 생략의 경향이 간혹 의당 있어야 할 주어까지 빠뜨리게 만든다. ‘-는 생각이다’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도 ‘나는’이 생략된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자가 읽고 그게 누구 생각인지 금세 떠오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누구 생각인지 밝혀 주는 게 필요하다.

□ 하라체가 사라지고 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6자회담의 공감대를 지켜라. 그 길만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지를 넓히는 최상책이다.

2003년도 신문의 사설, 칼럼에서 명령문 문장은 ‘하라체’보다는 ‘해라체’로 더 많이 쓰인다. 신문 사설과 칼럼에서 명령문 문장은 전통적으로 ‘하라체’로 쓰였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이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줘’가 아니듯이 말이다. 그러한 전통은 언제부터인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제 ‘하라체’는 거의 ‘하다’ 동사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어 보인다. 예컨대 ‘연기하라’로 쓰고 ‘연기해라’까지는 쓰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하라체가 퇴장하고 해라체가 더 자주 쓰이는 것은 독자를 마치 눈 앞에 두고 말하는 듯이 필자들이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사설, 칼럼에서 구어적 표현이 상당히 발견된다. 점잖지 못한 표현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구어에서 쓰이는 속어, 욕 같은 말이 신문에서는 금기시되어 왔는데 그러한 제약도 점차 약해져 가고 있어 보인다.

□ ‘-시키다’ 가 널리 쓰인다

어제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거부권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져 나오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적이탈 요구까지 거론되었다.

신문은 지면에서 좀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듯하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명사+시키다’형의 확산이라 생각된다. ‘인식시키다’, ‘참여시키다’와 같은 말은 ‘인식하다’, ‘참여하다’와 뜻이 완전히 다르다. ‘명사+시키다’는 남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명사+하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들 때에는 ‘-시키다’를 넣은 ‘인식시키다’, ‘참여시키다’를 써야 하고 내가 할 때에는 ‘인식하다’, ‘참여하다’를 써야 한다.

문제는 ‘-시키다’를 쓰나 ‘-하다’를 쓰나 뜻이 차이가 없는 부류다. ‘강화하다’나 ‘강화시키다’나 뜻이 같다. 그런데 ‘강화하다’로 부족하다고 보아 ‘강화시키다’를 쓴다. 즉 ‘강화하다’만 쓰이다가 ‘강화시키다’가 나타나 같이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늦게 나타난 ‘-시키다’가 ‘-하다’를 압도하기도 한다. ‘의혹을 불식하다’보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다’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런 ‘-시키다’ 확산을 신문의 글에서 많이 본다. 신문이 앞장서 그런 용법을 퍼뜨리는 게 아닌가 싶다.

□ ‘담보하다’ , ‘담보되다’ 를 애용한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가 곤란한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수사과 기소를 독립성 중립성이 담보되는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도입한 게 바로 특검제다.

신문의 글에서 ‘담보하다’, ‘담보되다’는 대단히 자주 나타난다. 거의 신문 용어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기까지 한다.

□ 외국어를 쓴다

우리사회의 기본 문제중 하나가 사회적 **마이노리티**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다.

‘마이너리티’, ‘컨센서스’ 같은 외국어가 나타난다. 때로는 그 정

도를 넘어서 대단히 어려운 말까지 나올 때도 있다. 사설이나 칼럼 집필자들이 그들의 해박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 어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 신문 문장에 기대하는 것

□ 객관적이어야

신문의 사설, 칼럼은 독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읽는 독자들도 고유한 판단 능력이 있기는 하겠지만 역시 사설, 칼럼의 글에 공감하거나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자세로 글을 쓰는 것이 바른 태도라 생각한다. 내가 누군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주어를 드러내고, 누구에 대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친절하게 밝히는 친절하고 당당한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

□ 문법을 생각해야

신문이 한정된 지면이라는 제약 아래 만들어지고 더구나 시간적 제약 아래 만들어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됐지 어떻게 문법을 철저히 지켜서 글을 쓰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문법의 개념이 문제이다. 문법 그 자체를 위한 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문법도 결국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있는 것이니만큼 최소한의 문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3. 앞으로의 과제

이 보고서는 주요 종합 일간지의 사설과 칼럼을 주로 분석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더 심화해 나갈 부분이 많다.

첫째, 분석 대상을 언론 종사자들의 글만으로 한정했다. 외부 기고자의 글도 분석해 봄직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뉴스 기사와 해설 기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뉴스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니만큼 별다른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겠지만 해설 기사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리라 생각된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 따라 기사의 특징이 차이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좀 더 대상을 분화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시대별 변화도 추적해 봄직하다. 사설, 칼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10년, 20년 전에도 그러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넷째,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지방신문, 통신의 사설, 칼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리라 믿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의 해설 기사도 역시 살펴보지 못하였다.

다섯째, 외국 신문의 사설, 칼럼과 비교해 보지 못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점들이 한국 신문에만 나타나는 것인지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밖에도 지적할 점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사설, 칼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하였지만 피상적 관찰에 그친 점이 없지

않다. 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문법성이 일그러졌다고 지적된 문장들에 대해 독자들이 과연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조사해볼 가치도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글의 유형을 크게 (1) 의미와 논리 (2) 문법 (3) 어휘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시 하위분류하였는데 이 분류 체계는 글쓴이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각 문장을 체계 속에 집어 넣을 때에 적절하게 들어갔는지는 많은 경우에 의문스럽다. 이 분류 체계를 잘 잡는 일과 각 문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제대로 찾아넣는 일은 앞으로 더 다듬어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다.

학예연구관 : 김 세 중(어문자료연구부)

발행등록번호 2003-1-27

신문 문장 분석

- 사설 칼럼을 중심으로 -

2003년 12월 26일 인쇄

2003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남 기 심(南 基 心)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02) 2669-9723

전송 (02) 2669-9727

인 쇄 성진문화사 (2278-6530)

《비매품》